

2019 포용적 문화국가 포럼

2019 포용적 문화국가 포럼

진행: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장)

등 록	13:30~14:00	
개 회	14:00~14:10	
기조강연	14:10~14:40	국가비전으로서 혁신적 포용국가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정책연구단장)
주제발표	14:40~15:30	문화비전 2030에서 바라본 혁신적 포용국가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문화비전2030 새문화정책준비단장) 혁신적 포용국가 담론에서 본 문화정책 김창룡 (인제대학교 교수,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휴 식	15:30~15:45	
주제토론	15:45~16:45	[좌 장]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장) [토론자] 김 진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은실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섯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통계센터장)
종합토론	16:45~17:00	
폐 회	17:00~	

2019 포용적 문화국가 포럼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2019.5.28(화) 13:30 - 17:00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주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2019
포용적
문화국가
포럼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2019.5.28(화) 13:30 - 17:00

2019 포용적 문화국가 포럼

제 1세션

기조강연

“국가비전으로서 혁신적 포용국가”	07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정책연구단장	

제 2세션

주제발표

“문화비전 2030에서 바라본 혁신적 포용국가”	31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문화비전 2030 새문화정책준비단장	
“혁신적 포용국가 담론에서 본 문화정책”	47
김창룡 인제대학교 교수,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제 3세션

주제토론

좌장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장	
토론자	
김 진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73
박은실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79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85
최섿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97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통계센터장	103

제 4세션

종합토론

		진행: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장)
등 록	13:30~14:00	
개 회	14:00~14:10	
기조강연	14:10~14:40	국가비전으로서 혁신적 포용국가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정책연구단장)
주제발표	14:40~15:30	문화비전 2030에서 바라본 혁신적 포용국가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문화비전2030 새문화정책준비단장) 혁신적 포용국가 담론에서 본 문화정책 김창룡 (인제대학교 교수,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휴 식	15:30~15:45	
주제토론	15:45~16:45	[좌 장]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장) [토론자] 김 진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은실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섿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통계센터장)
종합토론	16:45~17:00	
폐 회	17:00~	

2019 포용적문화국가포럼

제 1세션 기조강연

“국가비전으로서 혁신적 포용국가”

이태수 | 꽃동네대학교 교수,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정책연구단장

제1세션

기조강연

“국가비전으로서 혁신적 포용국가”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정책연구단장

기조강연



이태수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정책연구단장 / 꽃동네대학교 교수

2019 ~ 현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정책연구단장
 2018 ~ 현재 세종시복지재단 이사장
 2017 ~ 현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1999 ~ 현재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 사회복지전공 교수
 2017 ~ 2017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 위원

국가비전으로서의 혁신적 포용국가

2019. 5. 28(화)

이태수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정책연구단장
 꽃동네대학교 교수

문재인정부의 국가비전

2017년 5월 10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을 내세우며 촛불혁명의 힘으로 등장한 문재인정부는 2018년 9월 6일 대통령 주재 하 총리, 집권당 대표, 국무위원 등 13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용국가 전략회의' 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천명하다.



혁신적 포용국가의 선포



문재인정부의 포용국가

문재인대통령, 2019년 2월 19일 포용국가 3개년계획 발표
현장보고회에서 발제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 혁신성장이 없으면 포용국가도 어렵지만 포용이 없으면 혁신성장도 어렵다.

포용국가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역량이 중요하다**. 마음껏 교육받고 가족과 함께 충분히 휴식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 역량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배움·일·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

문재인정부의 포용국가

문재인대통령, 2019년 5월 7일
독일 알게마이네 차이퉁지(FAZ) 기고문 "평범함의 위대함" 中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행복할 때, 한 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가능합니다. **포용국가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국가 전체가 함께 성장하고, 그 결실을 골고루 누리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지금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며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원하는 만큼 공부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꿈을 위해 달려가고, 노후에는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토대 위에서 이뤄지는 도전 과 혁신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경제를 혁신성장으로 이끌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포용국가는 **사회경제체제를 포용과 공정, 혁신의 체제로 바꾸는 대실험**입니다.

문재인정부의 국가비전과 포용국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2017. 7.)과 포용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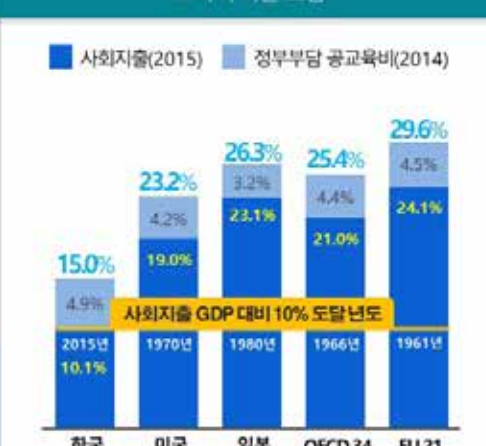
왜 포용국가인가?

한국 사회정책의 궤적과 성과

사회정책의 성과 : 복지국가 '초기단계' 진입

GDP 대비 사회지출비 추이(1960-2015)
교육비 지출 제외

사회정책의 꾸준한 발전으로 한국은 2010년 이후 사회지출이 GDP 10%에 도달하여 유럽이 1960-70년대 도달한 '복지국가 초기단계' 진입

사회정책 관련 공적사회지출 GDP 비율
교육비 지출 포함

사회지출비가 늘어나고 있으나 공교육비를 포함한 복지·노동 등의 사회정책관련 총지출의 GDP 비중은 15.0%로 OECD 평균 25.4%에 여전히 상당히 미달

사회정책패러다임의 성찰과 방향

기존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특징 : 최소주의 사회정책

발전국가패러다임

발전국가+신자유주의+진보주의

발전국가+신자유주의

박정희·김영삼(1961-1997)

- 국가주의 교육투자와 교육의 시장화
- 국가재정 최소화주의 보수주의 복지정책, 민간보험시장 성장 유도
- 가부장주의와 국가발전수단으로서 여성정책
- 경제성장을 위한 억압적·통제적 노동정책
- 공해방지 위주의 사후규제

김대중·노무현(1998-2007)

- 교육 민주화와 공공성·공평성 강조
- 보수주의 복지정책의 진보적 개혁과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중요성 인식
- 성차별적 법제도 개선과 성주류화 전략
- 노동시장 유연화 등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
- 사전예방적 환경정책 일부 진전

이명박·박근혜(2008-2017)

- 선택과 경쟁의 신자유주의 교육
- 보육서비스 확대 등 일부 진전에도 전반적 복지비용 억제 전략
- 성평등 실현보다는 저출산·저성장 해결 수단으로서의 여성정책
- 노동 교섭력 약화 등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가속화
- 4대강 사업 등 환경정책 후퇴

1960년대 한국의 산업화시대(개발시대)에 뿌리 내린 사회정책은 성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정책 제공, 국가재정의 최소화과 수익자 부담, 그리고 근로 유인의 저해 방지 등으로 설계된 '최소주의 사회정책' *minimalist social policy* 이고 최근까지도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사회정책패러다임의 성찰과 방향

기존 사회정책패러다임의 한계 : 사회부문의 낙후

경제지표와 사회지표의 격차



10

현재의 진단: 지속가능성 위기

가계의 지속가능성 위기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가계부담구조(2016)



건강보험 및 민간의료보험 가계 지출구조(2016)



공교육 및 사교육비 지출구조(2014)



노후, 의료, 교육, 주거 등 생활비용의 과도한 가계부담

시장 과잉의 역사적 유산

공공사회정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삶의 불안을 민간보험, 사교육, 민간 전·월세 등 가계부담(시장)을 통해 대응하는 구조가 80년대부터 역사적으로 정착

재생산 비용의 과도한 가계부담

노후, 의료, 교육, 주거 문제에 과도한 사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가계는 지속가능성 위기에 봉착

가계 자원 배분의 왜곡

공공사회정책의 미흡으로 가계의 합리적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복지정책 확대와도 갈등관계 형성

12

현재의 진단: 지속가능성 위기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 위기



고착화된 위기와 새로운 도전

고착화된 위기

- 저성장의 고착화와 자원조달 능력 하락
- 고령자 증가로 인한 내수 위축 및 복지비용 증가
- 노동시장 양극화와 소득·재산·교육기회 격차 심화
-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 관행

새로운 도전

- 미세먼지 등 환경 이슈의 국민적 민감도 증가
- 4차 산업혁명과 고용불안의 확산
- 성평등적 사회질서로의 재편 요구
- 1인 가구 증가 및 친밀성과 돌봄의 위기

11

현재의 진단: 5대 위기

대한민국 위기의 현주소



12

문재인정부 포용국가(사회정책)의 비전과 전략

14

문재인정부 사회정책 비전과 전략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회정책의 국제적 동향

-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성장전략의 재검토 및 사회정책의 중요성 재조명
- 사회정책을 통한 사회의 '포용성' 향상과 '혁신능력' 배양이 사회발전전략의 핵심으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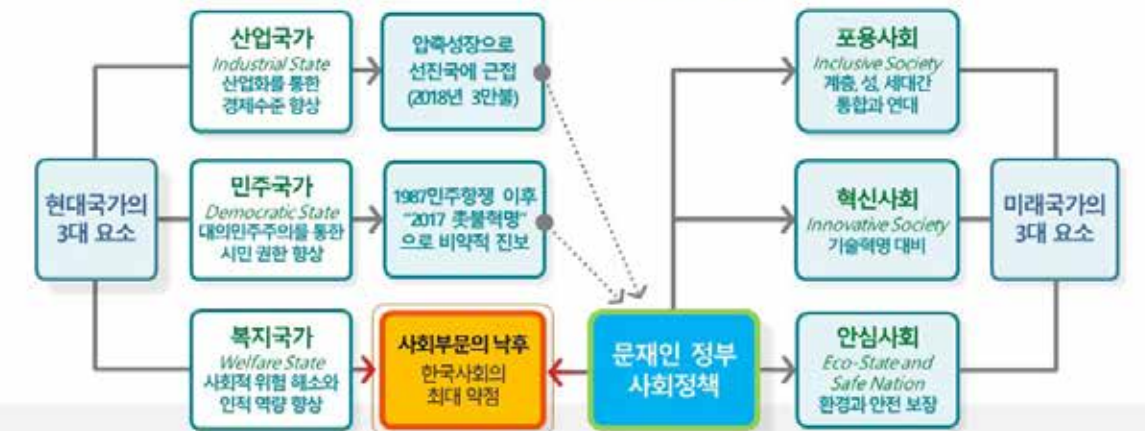
World Bank IMF	-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 불평등 증가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방해 - 기회의 평등을 위한 사회정책의 강조 - 인적자본 강화를 통한 혁신의 중요성 부각	포용 사회 혁신 사회
OECD	-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 불평등이 장기 성장 저해 1인당 GDP 외 환경, 고용, 문화 등 사회지표 개선 강조 - 인적자본 강화, 성별격차 해소의 중요성 강조	
ILO	-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 :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 제고 - 변화된 경제사회 환경에서 '사회보호 최저기준' 재정립(2020년 권고)	
European Union	- 사회투자 패러다임 : 생산적 요소로서 사회정책(교육과 직업훈련 아동보육)과 성평등 정책의 중요성 강조 - 사회투자를 통한 사회혁신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든다	
UN	- 지속가능발전(SDGs) : 경제 우선에서 환경, 사회, 경제의 선순환 발전 강조 - 경제 목표 외 빈곤, 성평등, 환경, 교육 등 17개 목표 제시	

15

사회정책패러다임의 성찰과 방향

한국사에서 문재인정부 사회정책의 역사적 임무

지체된 복지국가의 완성과 미래사회 대비



한국은 2차대전 이후 산업화·민주화에 성공한 대표적 국가이나 사회정책의 낙후로 현대국가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지체된 삶의 질을 개선하여 복지국가를 완성하고 미래의 기술혁명에 대비하여 계층·성·세대간 통합과 사회혁신을 위한 사회정책을 구축하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역사적 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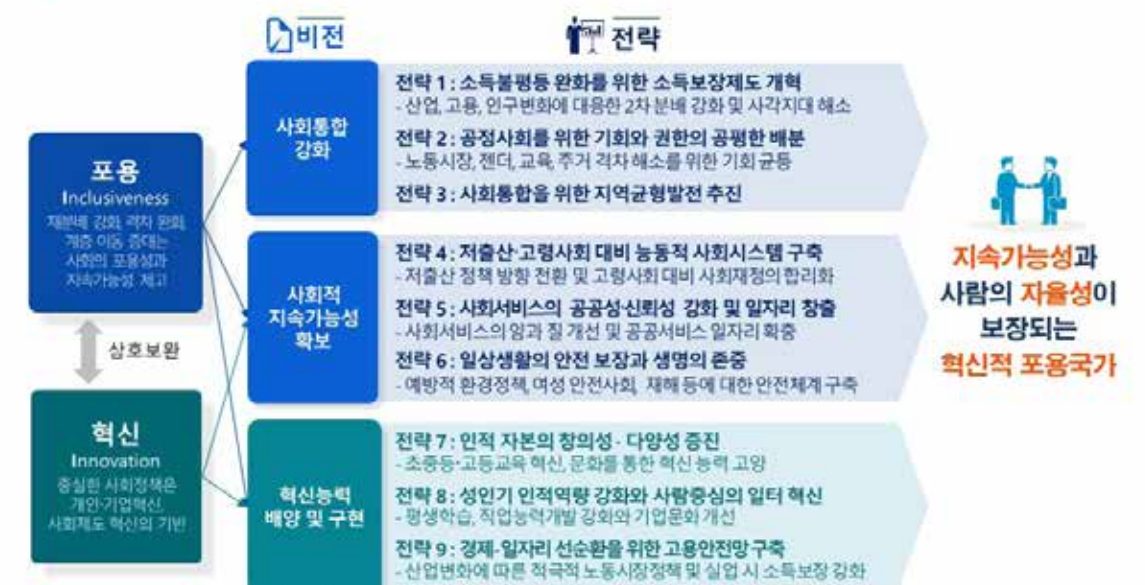
* 복지국가 :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의 힘과 기능을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국가(A. Briggs)

16

문재인정부 사회정책 비전과 전략

문재인정부 사회정책비전 : 3대 비전 9대 전략

- 사회정책 강화로 한국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기반 구축
- 포용은 혁신능력을 높이고 기술혁신의 결과(배제)를 보완해주는 상보적 관계



17

9대 전략 중 문화부문의 정책패러다임 전환

전략 7: 인적자본의 창의성·다양성 증진

	기존 정책패러다임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문화 정책	- 수동적 소비 위주의 문화정책 - 정치적·이념적 편향으로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내용 규제(예 블랙리스트) - 공급자지원정책으로 수요자 체감도가 떨어지고 지역별 문화여가시설의 사각지대 발생(예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문화여가시설 배치) - 특정산업에 대한 집중·편향지원으로 국민의 다양한 문화 향유·선택권 제약(예 영화, 게임 등으로 문화향유 편중 현상) - 문화정책의 개별화·분절화: 일, 돌봄 등 다른 시간사용 영역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설계의 한계	- 능동적 참여를 위한 문화정책 - 문화·예술 영역의 문화적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문화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 - 생애주기에 기반한 사회참여적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 확대 등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수요자 지원 강화 - 포괄적 문화선택권의 보장을 위해 다양한 문화영역의 지원과 장애, 젠더, 종교 등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한 기관 지원 확대 - 쉽고 여유를 통한 일상적 문화향유권 실현으로 개인의 내재된 창의성 회복(예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 정착, 장애 없는 문화여가서비스 환경 조성 등)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그리고 국민의 삶



현재 국민 삶의 선진국과의 격차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OECD, 2017) 29위

삶의 영역



생활기반



포용국가 3개년 계획을 통한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돌봄



아동

영유아
10명 중 **4명**
·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대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장애인

사각지대 해소
· 발달장애인 지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자립** 지원
· 직업교육·훈련 인프라



다양한 가족

미혼모·한부모
양육비 지원 확대
· 수혜인원 확대

다문화 가정
안정적 정착
지원 강화

22

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22년까지 약 **20.5만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22년까지 **34만개**

사회

가정

하루 한 시간, 임금 삭감 없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수평적 기업문화
일터 혁신 컨설팅과 노사인식 개선 추진
여성의 의사결정 대표성



일터

소득

자영업자의 자생력 제고
자영업 밀집 구도심 개발 **30곳**
최저임금 현장 안착과 임금격차 완화



24

배움

불평등의 연결고리 해소



고등학생의
수업료 부담이
없어집니다

대학생 **1/3**이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초학력 보장
교육 격차가
완화됩니다

창의적 인재 양성



더 **다양한**
교육 기회
고교학점제 도입
마을교육공동체



4차 산업혁명
혁신인재
혁신인재
12만 7천명 양성



전 생애에 걸친
역량 개발
성인 **10명 중 4명**
평생학습 참여

23

쉼

모든 읍면동에 문화체육시설이
1개소 이상 설치되어
동네에서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저소득층의 문화,
스포츠 향유권이
대폭 확대됩니다



일터에서도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예술인 파견 지원 확대

모든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휴가 시간은 늘어납니다



25

노후

인생 2막

새로운 인생 설계 지원은 **두 배로**
· 생애경력 설계서비스 5만명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80만개**

문화체육활동으로 즐거운 노후

노인 문화체육교실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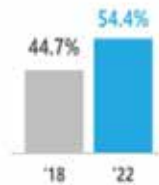
안정적인 노후

치매 부담비용은 **절반**으로

어르신 **4명 중 1명**은 방문건강관리 수혜

어르신 주거서비스 **4만호**

치매환자관리율



방문건강관리 대상



소득

고용안전망에서 배제된 국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50 만명
30~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157 만명
특고·예술인 등에게
고용보험 확대

평균임금의 **60**%
실업급여액을 늘리고
지급 기간도 연장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동수당 대상 확대
만 **7** 세 미만
모든 아동

기초연금 인상
25만원
30만원
'18 '21

장애인연금 인상
25만원
30만원
'18 '21

비수급 빈곤층 감소
89만명
47만명
'18 '21

환경/안전



쾌적한
환경

노후 경유차와
노후 석탄발전소가 줄어
미세먼지 환경이 개선됩니다



안전사고
예방

교통사고·산재·자살 사망자가
절반 수준으로 줄고
안전사고 발생도 줄어듭니다



여성
폭력범죄

여성 폭력범죄,
더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아동학대

아동학대 감시체계가 강화되고,
재학대 발생도 줄어듭니다



건강

건강보험 보장률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과부담 저소득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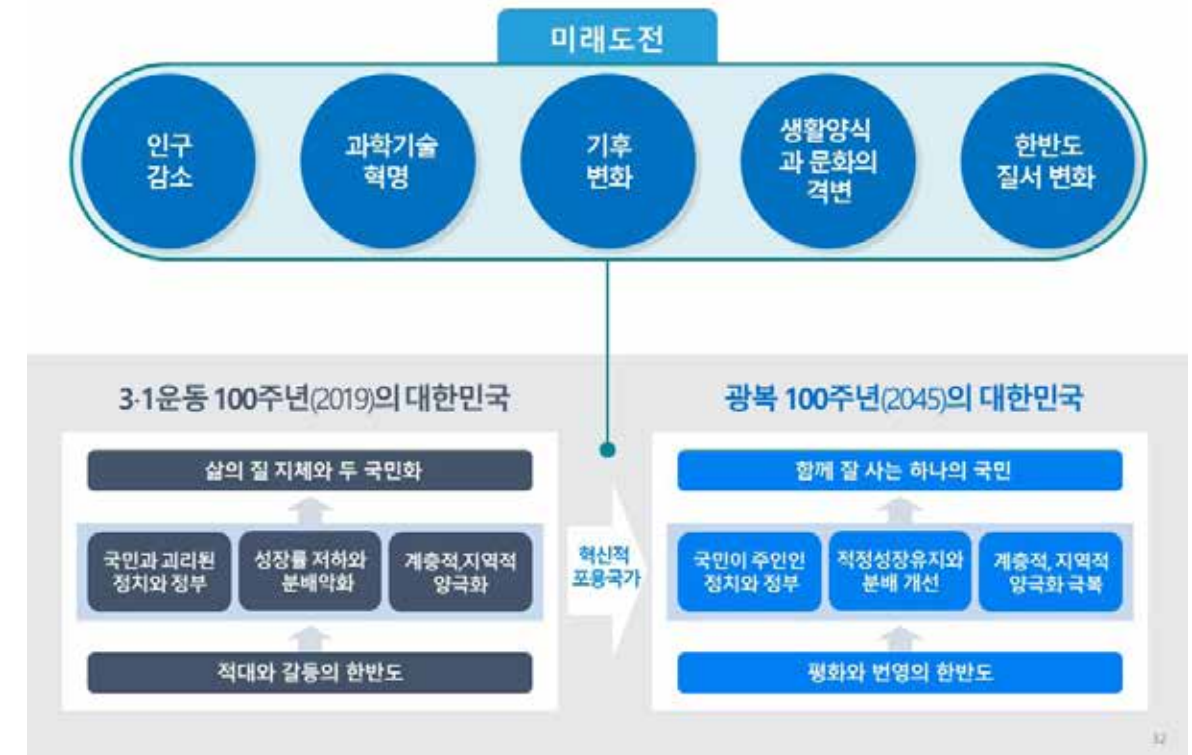
MRI, 초음파, 특진료,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의료비 부담의 **2/3**가 줄어듭니다

저소득층이 경험했던 재난적 수준의
의료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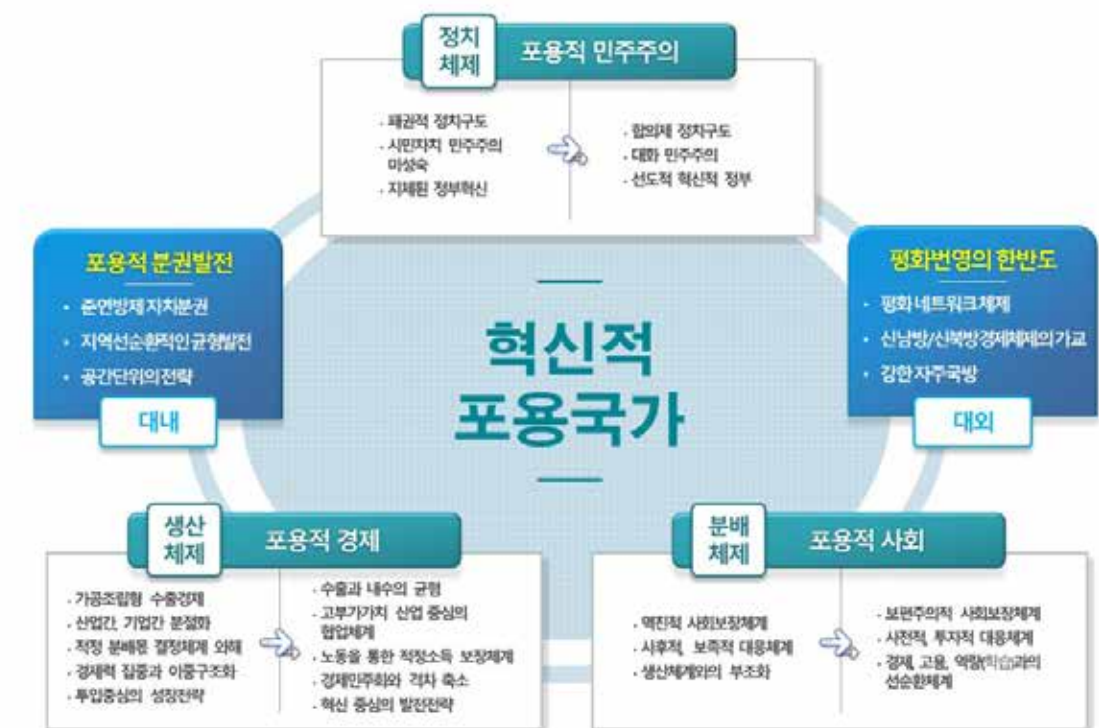
30

미래비전2045의 목표



32

혁신적 포용국가의 전체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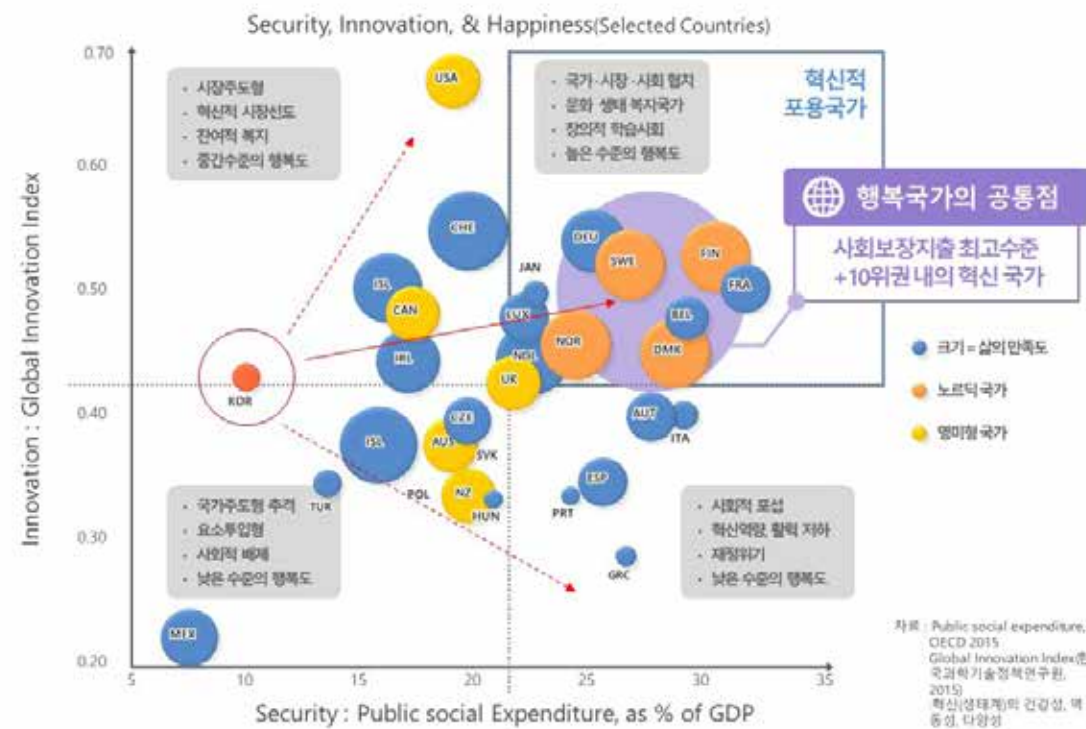


33

한국사회 미래 비전
-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향해

31

혁신적 포용국가가 만드는 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상



Thank you

감사합니다

제2세션

주제발표

01

“문화비전 2030에서 바라본 혁신적 포용국가”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문화비전2030 새문화정책준비단장

주제 발표



이동연

문화비전2030 새문화정책준비단 단장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2017 ~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기획처장

2017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비전 2030 새문화정책 준비단 단장

2017 ~ 현재 서울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위원장

2016 ~ 현재 서울시 서울아레나 프로젝트 MP, 플랫폼창동61 총괄예술감독

2012 ~ 현재 계간 <문화/과학> 편집인

문화비전 2030에서 바라본 혁신적 포용국가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새문화정책준비단장)

1. 문화비전과 혁신적 포용국가

2018년 12월 <새문화정책준비단>이 1년 3개월간 고생한 끝에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이하 문화비전2030)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22차례의 준비단 회의, 6회의 분과별 현장토론회, 4회의 문체부 장관 및 실국 관계자 워크숍, 13회에 걸친 찾아가는 문화정책 토론회 등 총 70여회에 걸친 협치를 통해 만든 문화비전2030은 국가 문화정책이 가야 할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문화비전2030은 2004년에 만들어진 ‘창의한국’ 이래 처음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틀을 갖춘 국가 문화정책 보고서라는 점에서 문화예술계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문화비전2030은 문화예술계를 황폐하게 만들었던 블랙리스트 사태, 위계와 권력에 의한 예술계 젠더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 이후에 국가 문화정책의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였던 만큼 문화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담을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과제 중의 하나가 ‘혁신적 포용국가’이다. 2019년 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에서 포용국가의 개념에 대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성장을 이뤄가면서 동시에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인 나라를 만들어 가자는 뜻”, “대한민국이 혁신적 포용국가가 된다는 것은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 “혁신성장이 없으면 포용국가도 어렵지만, 포용이 없으면 혁신성장도 없다.”, “혁신성장도 포용국가도 사람이 중심”, “포용국가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중요하다. 마음껏 교육받고, 가족과 함께 충분히 휴식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 역량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 이에 앞서 청와대는 2018년 연말에 포용국가 3대 비전 9대 과제에 대해 발표했는데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비전1-사회통합강화

- ①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 ② 공정사회를 위한 가치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 ③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 추진

비전2-사회적 지속가능성의 확보

- ④ 저 출산 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 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 ⑥ 일상생활의 안전 보장과 생명의 존중

비전3-사회혁신 능력배양

- ⑦ 인적자본의 창의성 다양성 증진
- ⑧ 성인기 인적역량 강화와 사람 중심의 일터 혁신
- ⑨ 경제 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

포용국가를 위한 3대비전과 9대 과제를 살펴보면, 국가 문화정책이 구체적인 실행과정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고, 특히 ‘문화비전2030-사람이 있는 문화’가 제시한 3대 가치와 방향, 9대 의제들과 50여개의 대표 과제들이 포용국가의 비전과 추진과제와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비전의 3대 가치인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도 포용국가가 내세우는 사회통합과 사회의 혁신성, 사람과 생명의 존중, 다양성의 가치 확산 등의 비전과 많이 맥락이 닿아 있다. 문화비전의 9대 의제 역시 문화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권리를 높이고,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어 문화가 특정한 콘텐츠와 지역과 계층에 쏠리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문화적 자원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창의적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포용국가의 비전과 공유할 것들이 많다. 특히 혁신적 포용국가의 개념을 이야기 할 때, “개인의 자율성”과 “공동체의 다양성”, “사회의 창의성”이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이러한 개념 역시 문화비전2030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 앞서 먼저 문화비전2030에서 제시한 국가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전환되어야 하는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2. 국가문화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그렇다면 국가문화정책의 문화비전은 어떠한 문화적 패러다임 전환을 담아야 할까?

첫째, 문화비전은 경쟁과 효율보다는 사람이 먼저인 문화로 전환해야 한다. 해방 이후 우리 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치열한 경쟁과 사회갈등을 겪었다.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1966년에 불과 1인당 국민소득 114불, 수출은 2억 5,575만 달러에 불과했던 것이 50년 후인 2016년에는 2만 7561달러로 241배, 수출은 6천억 달러로 2,400배가 상승했다. 먹고 살만해 졌지만, 살벌한 경쟁과 숨 막히는 발전 논리에 시달려야 했다. 치열한 입시경쟁, 경제 불균형, 지역 격차, 이주민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심화가 뒤따랐다. 이제는 이러한 사회적 재난에 대비하고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로 전환해야 하며, 문화시설보다는 그 시설을 즐기는 사람을 중시하는 문화정책으로 나가야 한다.

두 번째, 문화비전은 위기와 청산에서 비전과 미래의 문화로 나가야 한다. 국가 문화정책은 이제 블랙리스트도, 화이트리스트도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며, 검열과 통제의 정책에서 자율과 협치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난 10년 간 국가 문화정책이 관리해 온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밝히고, 다시는 국가가 문화예술인들을 이념적 잣대로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문화예술인의 창작 자율성, 지원 독립성을 위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안제시를 통해서 문화정책이 헌법에 명시된 예술가의 창작의 자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문화비전은 또한 과거 청산에만 머무르지 말고 미래 비전을 구상하는 문화정책, 즉 인구감소,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한반도 평화 등 우리 사회의 변화 양상을 간파하고 그에 적합한 중장기 문화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세 번째, 문화비전은 불공정과 독과점에서 공정과 상생의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불공정으로 기울어진 문화현장을 바로잡는 문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공연예술 현장에서 벌어지는 위계권력과 계약불이행, 혹은 불공정 계약 등으로 현장 기층 예술인들이 적절한 대우와 보상을 받지 못하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콘텐츠산업, 관광산업에서도 기층 현장인력들이 계약과 불공정 관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체육계에서도 선수와 지도자, 선배와 후배 사이에 위계에 의한 부당한 관계가 개선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네 번째, 문화비전은 중앙 집권에서 자치 분권의 문화로 전환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분권 형 개헌으로 문화 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문화 분권의 실현에서 지

역문화 정책은 핵심적인 사안으로 장기적으로 문화정책에서 자치 분권의 시대를 열기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지역문화의 분권은 문화균형 정책만이 아니라 문화정책, 행정, 계획 등에 있어 각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을 살릴 수 있는 문화자치로 이행해야 한다.

다섯 번째, 일 중심에서 쉼이 있는 문화로 우리의 일상이 바뀌어야 한다. 한국은 2016년 기준 OECD 국가 중 연간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멕시코(2255시간)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OECD 회원국 35개국 평균인 1764시간보다 305시간이 더 많다. 과도한 노동시간으로 개인의 삶의 질이 저하될 것이 우려될 정도이다. 따라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자유시간을 늘려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는 문화여가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문화 취미활동을 권장하고, 스포츠클럽을 확대하고, 여행의 기회를 확대하여 일 중심에서 여가 중심의 문화로 삶의 가치가 바뀌어야 한다.

여섯 번째,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간 소외가 아닌 인간 감성의 문화를 견지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 하면서 기술자동화에 따른 인간 노동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졌다. 인간의 일을 로봇이 대체하면서 대량 실업 사태가 우려되고, 인간의 본연의 노동과 생산력에 대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문화와 예술이 기술과 경제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기술과 경제를 통제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미래의 문화정책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이 경제발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인간의 창조적 상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비전은 젠더불평등에서 젠더평등의 문화로 나가야 한다. 최근 한국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미투 운동은 젠더폭력에 저항하는 운동으로 위계와 권력에 의한 젠더 불평등의 현실을 고발하고 실제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불평등을 없애는 실천으로 발전하고 있다. 문화예술계에서 일고 있는 미투 운동은 오래 동안 지행되었지만, 침묵했던 남성 위계 권력에 대한 일상적 성폭력과 성차별을 고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투 운동은 문화예술계 안의 젠더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정책에서 젠더 감수성의 고려와 젠더 주류화의 제도적 실천을 통해서 젠더폭력의 구조가 바뀌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비전은 젠더 폭력에 대응하고, 젠더 감수성을 중시하며, 젠더의 주류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3. ‘문화비전2030’의 가치와 방향

문화비전2030은 이러한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기반으로 하여 문화의 기본에 충실하도록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3대 가치로 설정하였다. 자율성은 개인의 자유로운 문화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자율성은 스스로 문화의 주체가 되고, 다양한 문화취향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지향한다. 다양성은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집단들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들의 문화적 힘을 펼쳐나가는 것을 말한다. 국적, 인종, 종교만이 아니라 세대, 성, 성차를 아우르고, 나아가 예술의 크고 작은 집단들이 서로 다양하게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창의성은 단지 문화콘텐츠를 육성하는 산업 역량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가 혁신하는데 있어 문화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의 창의성은 교육, 복지, 도시재생, 통일 분야에서 문화가 사회발전과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3대 가치를 기반으로 문화비전2030은 개인의 자율성의 보장, ‘공동체의 다양성의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이라는 3대 방향을 정했다. ‘개인의 자율성 보장’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문화적 권리를 중시한다. 국가 문화정책에서 개인의 문화적 권리는 개인이 스스로 문화적 활동의 주체가 된다는 것만 아니라 일상에서 개인이 문화적 활동을 통해서 자율적이고 감성적인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문화 활동의 접근권 보장을 동시에 가능케 하는 것이다. ‘공동체의 다양성의 실현’은 계층, 세대, 성차, 지역 등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다양성의 원리는 차이와 공존의 가치를 중시한다. 문화와 예술의 자원이 한쪽 집단에 쏠리지 않도록 다양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통문화유산을 중시하되, 현재와 공존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역문화 분권의 실현은 문화다양성의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의 창의성 확산’은 문화가 사회혁신의 동력이 되도록 사회의 다양한 영역과 만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창의성은 단지 문화예술의 창작물을 만드는 원천만이 아니라 문화가 교육, 환경, 복지, 통일과 같은 사회정책의 영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원리가 된다.

4. ‘문화비전2030’의 9대 의제

이러한 문화비전의 3대 가치와 방향을 기초로 문화비전2030은 대표적으로 9대 의제를 설정했다. 3대 방향에 따른 9대 의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대 방향	9대 의제
개인의 자율성 보장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문화예술인/종사자 지위와 권리 보장
	성평등 문화의 실현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지역 문화분권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	문화자원의 융합 역량강화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개인의 자율성 보장’의 대표과제는 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 향수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시에 가족과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첫걸음 문화카드’ 지원과 집 가까운 동네에서 문화여가를 즐기는 ‘문화놀이터’ 사업, 그리고 생활예술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나도 예술가’ 프로그램이 눈에 띈다. 문화예술인/종사자 지위와 권리 보장에는 가칭 ‘예술인지위와 권리에 관한 법률’ 제정, 예술인 사회보장을 위한 고용보험 실시 등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성평등문화 실현’은 당초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투운동이 확산되면서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의제로 합류했다. 성적 위계에 의한 차별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서, 여성이 문화예술계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에서 제시하는 의제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지역 문화분권 실현’이다.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을 위해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사라져가는 언어와 전통문화의 보호, 그리고 관광과 체육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확대하는 과제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의 의무화, 문화콘텐츠 유통불공정 행위 해소, 공정한 스포츠문화 환경 조성을 할 계획이다. 지역 문화분권의 현실화하기 위해 문화도시 50개 선정, 매력적인 지역관광도시 선정, 협치를 위한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립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의 창의성 확산에는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하는 융합적인 문화자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창의적인 예술교육과 문화 R&D 확대 등을 제시했고, 미래와 통일을 위한 문화협력을 확대하고자 ‘남북문화교류 협정체결’, ‘남북문화동질성회복 프로젝트’ 등을, 문화가 사회혁신의 중요한 매개체가 되도록 일상과 삶이 통합되는 문화지대 조성, 창의적인 혁신학교 설립, 창의적 문화일자리 확대 등을 제시했다.

5. 혁신적 포용국가의 관점에서 본 ‘문화비전2030’의 의제들

[비전 1 - 사회통합강화]

①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 전 국민에게 문화복지 확산(의제1번 “개인의 문화권리 보장”)
 - 통합문화이용권제도 개선과 확산
 - 생애주기별 문화복지 확산
 - 생활문화공간을 재편해 전 국민적 문화향유 확대
- 예술인 복지 통합정책 지원체계 수립(의제2: 문화예술인 종사자 지위와 권리보장 “)
 - 예술가들을 위한 연금제도와 의료지원정책 마련
 - 예술인고용보험 도입과 예술인복지센터 개소
 - 예술인 창작주거 연계 복지 확산
 - (가칭) 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 운영

② 공정사회를 위한 가치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공정한 대가체계 마련(의제4,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 예술가 사례비의 제도화
 - 예술지원의 공정하고 다양한 심사제도 도입
- 문화예술계 불공정 관행 개선(의제4,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 표준계약서 확대와 서면계약 의무화
 - 예술계의 불공정 관행 신고센터 역할 확대

-예술창작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와 합리화

- 문화콘텐츠 유통과 노동 불공정 개선 법률 제정(의제4: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 콘텐츠시장 공정성을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등 기반 마련
 - 콘텐츠 유통 불공정 개선과 감시 위한 제도화
 - 콘텐츠 불법 유통과 불공정 거래 관련 관리□감독과 제재 근거 마련

③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 추진

- 지역 문화자치를 위한 기반 조성(의제5: 지역 문화분권의 실현)
 - 지역문화진흥 재원의 지속적 확충
 - 지역 주민 참여문화예산제도 지원
 - 지역문화 정책기반으로서 문화정책 전담기관과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지정 활성화
 - 지역의 문화인력 양성과 활동 지원
- 지역 문화의 고유성 유지·발전
 -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재생사업 확산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역특화 콘텐츠 육성
 - 지역축제 지원체계 개선

[비전 2 -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확보]

④ 저 출산 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 일과 삶의 균형으로 여가친화 사회환경 조성(의제1: 개인의 문화권리 보장)
 - 노동시간 총량 관리 및 근로자 휴가권 강화
 - 휴가시간을 확보해 여가 경력 개발
 - 여가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
 - 잃어버린 삶의 시간 회복 ‘쉽이 있는 삶’ 캠페인
- 창의성과 상상력을 갖춘 시민·인재(의제7: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 이동부터 노년층까지 창의교육 접근 기회 확대

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 창의성과 상상력을 갖춘 시민·인재(의제7: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책 읽는 문화 조성
 -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비한 정책대응
- 공공문화 서비스와 사회문화적 일자리 전환
 - 공동체형 문화 일자리 확대

⑥ 일상생활의 안전 보장과 생명의 존중

- 성차별·성폭력 없는 문화생태계 조성(의제3: 성평등 문화의 실현)
 - 문화계·체육계 등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침해 구제 관련 법 제화 추진
 - 분야별 성차별·성폭력 실태조사 정례화·활용
 - 분야별 성차별·성폭력 신고 및 피해자 보호·지원센터 설치
- 기후변화에 문화적으로 대응
 - 환경·에너지·생태 중심 문화적 전환도시 계획 도입
 - 문화시설과 행사에 에너지 전환 개념 도입

[비전 3 - 사회혁신 능력배양]

⑦ 인적자본의 창의성 다양성 증진

- 창의성과 상상력을 갖춘 시민·인재 (의제7: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 문화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및 정책연구·전략기획 지원 강화
- 문화자원과 신기술·지식 융합 촉진 (의제7: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 체험형 기술로 아날로그 경험의 확장 지원
 - 스마트 기술과 지식 기반 관광서비스 발굴
 - 신기술을 활용해 스포츠 본연의 가치를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스포츠 발굴
- 더 나은 삶을 위한 ‘공론·학습·해결의 문화플랫폼’ 모델 확산(의제 10: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 문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삶 개선 정책 ‘문화로 바꾸는 삶’ 추진
- 문화와 사회혁신 분야 프로젝트 기반 ‘혁신학교’ 운영
- 문화 공유지 활성화에 따른 지역·공간 재생 (의제 10: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 지역 주민 주도 문화자원의 활용계획 마련·운영
 - 문화적 활용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민 역할 확대

⑧ 성인기 인적역량 강화와 사람 중심의 일터 혁신

- 여성친화적 생태계·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문화정책(의제3 성평등 문화의 실현)
 - 문화예술, 문화산업, 체육 등 각 분야 여성활동 활성화 지원
 - 여성 문화·체육활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인식 제고
 - 문화정책을 통한 성평등 사회 실현
 - 성평등 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담조직·재원 확보

⑨ 경제 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

- 문화예술인·종사자(예술·스포츠·관광·콘텐츠 분야) 노동권·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확충
 - 〈가칭〉문화예술노동권위원회 운영(의제2 문화예술인 종사자 지위와 권리보장)
 - 예술가의 직업훈련·직업개발 여건 개선과 지원정책 도입
 - 저작권 제도 개선
 - 예술인 직업분류와 취업기준 차별화 추진
 - 예술의 사회적 가치,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에 관한 인식 제고
 -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부서 간/부처 간 정책협력체계 구축

6. 문화비전과 혁신적 포용국가 연계를 위한 주요 실천 방향

문화비전2030은 문화정책의 분과 중심주의에서 문화의 통합적 역할과, 가치 지향적 의제를 발굴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성평등 문화의 중요성 부각하여 젠더평등이 문화의 영역에서 실현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문화비전2030은 문화가 사회의 다른 영역에 어떻게 스며들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담고 있어, 앞으로 문화정책이 다른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국가문화정책은 문화정책의 혁신과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특히 문화정책이 경제정책에 종속되어서는 곤란하다. 경제논리에 종속되지 않도록 문화정책의 새로운 발상전환이 필요한데, 가령 돈을 써야 할 것과 돈을 벌어야 할 것에 대한 장기적인 기획과 전략이 요구된다. ‘문화비전2030’은 거듭 강조하듯이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운동을 성찰, 극복하면서 우리 사회가 사람을 어떻게 존중하고 사람의 창의적인 역량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산물이다.

문화비전2030이 단지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국가 문화정책의 미래를 결정하는 실행과제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혁신적인 포용국가의 국정 과제가 문화정책 안으로 스며들기 위해서는 문화비전에 담긴 정책과제들이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마지막으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세 가지 비전과 9가지 의제에 맞는 문화비전 2030의 주요 실천 방향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민의 문화적 권리가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혁신적 포용국가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있어 문화의 위상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포용국가를 소득균형과 분배, 복지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포용국가에서 혁신성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포용성을 넘어서 문화적 포용성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 국민의 문화향수기회 확대와 사회적 혁신을 위한 문화자원의 창의적 확산은 매우 중요한 의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첫 번째 걸음이 바로 국민의 문화권 권리의 보편적 실현이다. 모든 국민이 경제적, 성적, 성차적, 지역적, 인종적, 종족적, 종교적 차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일상 안에서 다양한 문화적 권리를 행사하여 삶의 질이 높아지는 사회가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본 토대라 할 수 있다.

2)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 산업이 공정하고 다양하게 발전해야 한다.

문화예술이 전체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지만, 한편으로 양극화 심하고, 불공정 관행들이 잔존하

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 없이는 안정적인 생태계가 유지될 수 없다. 문화콘텐츠 산업 역시 수직계열화로 인한 콘텐츠 제작과 유통의 독점 현상이 심하고, 제작 환경이 역할하며, 인력 시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되어, 전체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힘든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문화예술의 창의성과 함께 문화예술계와 문화콘텐츠 시장이 공정하고 다양하게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도 포용국가의 혁신성의 장기 비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문제의식이라 할 수 있다.

3) 문화분권의 실현으로 지역문화의 고유성이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

혁신적 포용국가의 국정철학에서 문화 분권 역시 매우 중요한 의제이다. 지역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과 유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포용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길목이다.

지역과 지역시민들을 포용하되, 정치적-경제적으로만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문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설계하는 것이야말로 혁신적인 포용국가로 가는 분권정책이 아닐 수 없다.

4) 문화자원이 사회 혁신의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한다.

포용국가의 혁신성은 창의성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경제는 발전했지만 사회적 토대와 담론이 낡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국가와 사회는 혁신적이라고 볼 수 없다. 창의적이면서도 다양하고, 혁신적이면서도 공정한 국가의 미래 비전에는 문화예술의 창의성이 국가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영국의 창조산업 플랜이 한때 위기에 빠졌던 영국 경제를 일으키는 게 일조했고, 1990년대 말 김대중 정부의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정책이 지금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 동력이 되었듯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사회의 혁신 동력에 문화예술의 창의적 역량강화가 핵심 의제가 아닐 수 없다. 문화적 도시재생, 기술혁신 형 R&D 산업, 미래의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문화자원의 융합, 콘텐츠 산업을 주도할 창의적 인력양성 등의 의제들이 이에 해당된다.

제2세션

주제발표

02

“혁신적 포용국가 담론에서 본 문화정책”

김창룡

인제대학교 교수,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주제 발표



김창룡

인제대학교 교수,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2018 ~ 현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지속가능분과 위원
 1999 ~ 현재 인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2001 ~ 2018 인제대학교 국제교육원장
 2010 ~ 2013 인제대학교 대외교류처장
 2002 ~ 2003 KBS, MBC '미디어 비평' 자문위원



21세기 문화 강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

21세기 문화강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



- 1.**
세계를 놀라게 하는 방탄소년단/음악한류
-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1위
 - 빌보드 뮤직 어워드 2관왕.
 - '톱 소셜 아티스트(Top Social Artist)' 부문
 - '톱 듀오/그룹(Top Duo/Group)' 부문

21세기 문화강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



- 3.**
포용국가 문화소외계층 현실/한류의 그늘
- 선 등 도서지역의 문화소의 현실은 개선이 더딘 편
 - 중앙정부가 지역의 문화격차 해소에 관심과 지원 절실

21세기 문화강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

2.

온두라스 공립 초교 태권도 정규과목 채택/태권도 한류

- 전 세계 태권도 인구 1억여 명
- 초중고 최초 정규과목 채택



세계 속의 음악 한류

세계속의 음악 한류



싸이, 강남스타일...최단 기간 1억 뷰 돌파
-기획사 없이, 미국 시장 가지않고 세계스타로 부상
-뮤직 비디오 성공과 손안의 스마트폰, SNS 가능케.

세계속의 음악 한류



페기 구(Peggy Gou)

-BBC 라디오 선정 2018년 올해의 노래
'잊게 하네(It makes me forget)'
-포브스 선정, 2019년 아시아 영향력 30인에 포함

세계속의 음악 한류



방탄소년단(BTS)

-2019년 미국 NBC 방송 뮤직 어워드 최고의 스타
-새로운 기록 경신은 진행형

세계속의 음악 한류

-LG가 최근 G5 휴대폰 광고 모델을 방탄소년단에서 페기 구로 바꿈.



세계속의 태권도 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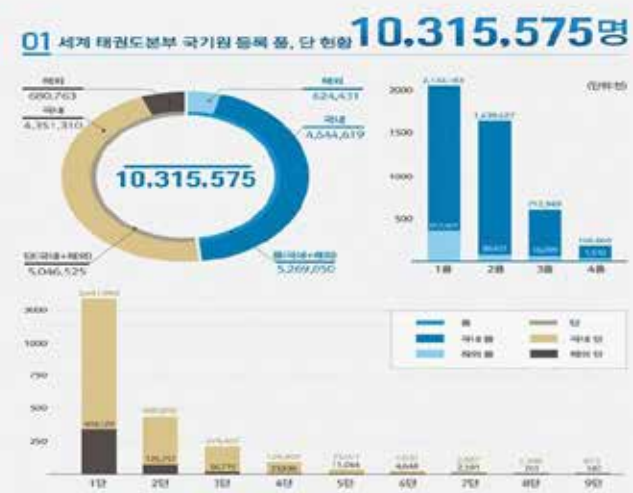
세계속의 태권도 한류

스포츠를 넘어 한류문화 전파의 최선봉, 태권도



세계속의 태권도 한류

국기원의 세계 태권도 유단자 인구분포



포용 사회 문화 소외계층
:한류의 그늘

포용 사회 문화소외 계층 :한류의 그늘

뉴욕 타임즈 눈에 비친 한국 시골 풍경



제언
:향후 정책방향

포용 사회 문화소외 계층 :한류의 그늘

강진보다 더한 섬마을, 울릉도

- 지하철 없는 도서지역 65 세가 돼도 공짜 지하철은 그림의 떡
- 생존 교육인 수영은 배울 수 없는 섬
- 극장 하나 없는 낙도



음악 한류

- 한류문화서비스센터(가칭) 설립 추진
 - 국내외 한류 관련 문의 접수 및 연결, 정보제공 창구 일원화
 - 최소한 5 개 국어로 연중무휴 24 시간 온라인 서비스 제공
- 세제감면 등 지원정책
 - 신남방정책 대상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한류스타들의 자선 혹은 개별 공연에 대해
 - 특히 동남아 지역은 한류스타들을 직접 보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나 높은 개런티 등으로 감당하기 힘들

태권도 한류

- 태권도 세계화 컨트롤 타워 필요
 - 국기원, 태권도 공원, 세계태권도연맹 등 협업 체제 절실
 - 태권도 유학,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상시 운영 필요
 - ※ 이스라엘의 율판 모델 참조
- 태권도 프로 시범단 선발 확대, 상시 파견 제도
 - 현지 태권도 기관과 방송사 등과 협업 체제, 상생 프로그램 구축
 - 세계 태권도 대회 메달리스트 초청, 연수 특혜 제도 신설,
 - 국가별 초청자, 시범단에 포함, 해당 국가 파견 시 동행, 현지인들의 환호 기대

혁신적 포용국가 담론에서 본 문화정책

김창룡 인제대학교 교수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문화 소외 계층

- 문화체육부가 지자체와 별도 문화지원 협의체 구축
 -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원과 평가를 겸한 지원정책의 실효화
 - 찾아가는 맞춤형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 제의
 - (지역별, 계절별, 연령계층에 필요로 하는 문화, 스포츠, 평생교육 등)

혁신적 포용국가의 문화정책

-문화 소비자의 관점에서-

김창룡 인제대학교 교수
정책기획위원회 지속가능분과 위원

I. 서론 - 배경과 목적

문재인 정부의 공정한 문화산업육성 정책에 힘입어 21세기 한국은 명실상부한 문화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은 한국의 대표적인 한류 전도사로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최근 새 앨범 'MAP OF THE SOUL : PERSONA'(맵 오브 더 소울 : 페르소나)를 발매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새 앨범을 통해 연일 신기록 행진을 이어나가며 '방탄소년단'이라는 브랜드 가치와 함께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동시에 세계시장에 각인시켰다.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인 '빌보드 200' 1위에 이어 '작은 것들을 위한 시'와 'Make It Right'(메이크 잇 라이트)는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각각 8위와 95위로 동시 첫 진입하는 기염을 토했다. 빌보드 '핫 100' 8위는 방탄소년단이 'FAKE LOVE'(페이크 러브)로 세운 한국 그룹 최고 기록인 10위를 자체 경신한 기록이다.

노래 한류보다 더 강력한 파급력을 가진 태권도는 종주국 한국의 대표브랜드로 이름을 드높이고 있다. 세계 태권도인구 1억명을 넘어 유단자 수만 2018년에 1천만 명을 돌파, 태권도브랜드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각광받고 있을 정도다.

우리 한민족 고유의 무술, 태권도는 얼마 전 영국에서 뉴스로 유튜브에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바로 영국의 좀도둑이 태권도 유단자인 상점 주인에게 불잡혀 제압당하는 모습이 유튜브에 공개된 것!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태권도 2단이라고 밝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태권도는 종주국인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은 전세계 태권도인들과 그 가족들의 우상이 될 정도다.

문재인 정부에서 태권도 세계화 정책에 힘입어 태권도가 2019년 중남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온두라스에서 공립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과목으로 정식 채택됐다. 주온두라스대사관은 온두라스 태권도교육재단, 국기원, 온두라스 교육부와 함께 수도 테구시갈파에 위치한 과테말라초등학교(Centro de Educación Básica República de Guatemala)에서 태권도 지도자, 교사, 학부모, 태권도 수련 학생, 테구시갈파 시내 태권도 수업 실시 공립학교 관계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두라스 공립 초등학교에서의 태권도 정규수업 시작을 기념하는 공식 행사를 개최하였다고 외교부가 소개했다.

음악, 스포츠, 드라마 등 문화 강국 한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호평받고 있는데 반해 정작 국내에서는 자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부족한 편이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표방하는 현정부에서도 문화강국을 위한 제도개선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세종학당 지원도 늘어났고 문화교류 활성화도 주목된다.

다만 부분적으로 아쉬운 점은 국내 문화 소외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여전히 개선이 더딘 편이다. 포용적 사회,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 서비스는 시설도 인프라도 전문인력도 모두 부족한 편이다.

여기서는 한국문화가 해외에서 얼마나 각광받고 있으며 이는 국가브랜드 제고와 한국상품 마케팅 개척과 직결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류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하고 스스로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지원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한류확산과 대조적으로 국내에서 문화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문화 소비자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폭넓은 문화의 영역을 모두 언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관계로 음악한류, 태권도, 문화소외계층 등 3개 키워드를 중심으로 발제를 선택, 준비했음을 알려드린다.

II. 본론 - 음악한류, 태권도, 문화소외계층

1. 세계를 즐겁게 하는 음악한류

세계적인 뮤직 비디오 아티스트,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전세계를 즐겁게 만든데 이어 방탄소년단은 새롭게 한류스타로 각광받고 있다. 미국, 영국 등 문화 강국을 자부하는 나라의 음악차트 순위에도 돌풍을 가져오는 현상에 대해 국내 언론은

대서특필하고 있다.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인 '빌보드 200' 1위에 이어 '작은 것들을 위한 시'와 'Make It Right'(메이크 잇 라이트)는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각각 8위와 95위로 동시 첫 진입하는 기록을 세웠다.

방탄소년단 뿐만 아니고 세계를 무대로 DJ 겸 가수, 모델로 활약 중인 한국인, 폐기 구(Peggy Gou)도 한류문화 선봉장 노릇을 하고 있다.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국내에는 덜 알려진 폐기 구의 한글로 만든 노래가 어떻게 전세계인들이 즐겨 부르는지 소개하고자 한다.¹⁾ LG는 최근 세계시장 판매를 위한 휴대폰 광고모델을 방탄소년단에서 폐기로 바꿨다. 폐기는 2019년 포브스 선정 아시아에서 영향력있는 30인에 포함됐다.

2018년 영국 BBC 라디오 선정, 올해의 노래로 선정된 곡은 폐기 구의 '잊게 하네 (It makes me forget)'였다. 영국 대중들을 상대로 조사해서 선정한 곡이 한글로 된 가사라는 점은 이례적이다.

한글로 된 가사가 서양인들의 입을 통해 떼창을 하는 모습은 과거에는 상상하기도 힘들다. 폐기 구는 2019년 최근 또 다른 한글 가사로 된 노래 '별이 빛나는 밤 (Starry Night)'을 발표했다. 이 역시 전세계인들의 환호 속에 세계무대를 상대로 레코드 판매 순위 상위를 기록 중이다.²⁾

1) 동아일보, 세계적 한국인 DJ 폐기 구 "폐기는 엄청 바빠요!"

임희운 기자 입력 2019-04-24 03:00수정 2019-04-24 04:04

새 앨범 'Moment' 발표하고 설치미술전에도 참가

獨서 시작 세계무대 누비는 DJ... '폐기 뭐해?' LG폰 광고로도 화제

"최근 버닝썬 사태에 충격과 분노... 외국선 밀실형 VIP룸 상상 못해"

"폐기, 뭐해?"

최근 TV와 유튜브에서 화제를 모은 국내 기업의 스마트폰 광고, 쇼핑, 디제잉 등 '폐기'의 일상과 일을 카메라로 쫓는 것이 스토리의 전부다.

올해 포브스 선정 '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 30인', 지난해 영국 AIM뮤직어워즈 '올해의 노래' 수상. 최근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 외신은 독일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그를 '세계를 점령해가고 있는 DJ'라고 일컬었다.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서 만난 DJ 겸 프로듀서 폐기 구(28)는 "해외 활동이 많지만 한국과의 연결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 광고 출연은 좋은 기회"라고 했다. 인스타그램에선 세계 약 70만 명의 팔로어가 그의 일상에 깃든 음악과 패션 등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닌다.(하락)

2) 미국 콜로라도 주 덴버에 본사가 있는 Beatport 비트포트는 전 세계의 일렉트로닉 음악의 데이터 베이스이자 음원 판매 사이트로 2019년 4월 폐기구의 '별이 빛나는 밤' 레코드 음반판매 1위,2위를 다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 영화 등도 한류문화의 다른 영역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오히려 너무 지나쳐서 해외에서 방영을 제한하는 등 문화의 영역에서도 통제를 가하고 있을 정도다. 정부는 외교 등을 통해 상호 문화 존중과 문화 교류 지원정책 등을 폭넓게 현지인들을 위한 서비스 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2. 스포츠를 넘어 문화강국의 대표브랜드, 태권도

전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태권도는 한국이 종주국으로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뒤 더 많은 국가의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특히 태권도의 모든 동작과 경기 룰 등은 한국어로 진행되고 있어 한국어 확산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태권도 세계화 전략에 발맞춰 중남미의 온두라스 공립 초등학교에서의 태권도 교육은 수도 테구시갈파 소재 12개 학교, 제2의 도시인 산페드로술라 소재 1개 학교, 엘쁘레그레소 소재 2개 학교를 포함한 총 15개 학교 학생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한다.³⁾

온두라스뿐 만아니라 전세계 여러 중고등학교에서 태권도는 스포츠 과목으로 선정돼 교육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도 태권도 동호인 클럽이 활성화 되고 있다. 스페인, 이란, 이집트, 이스라엘 등지에서 태권도는 국내보다 더 대중화, 저변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들은 한국의 국기원이나 무주의 태권도공원 등에 태권도 유학을 오는 것이 평생의 꿈이라고 한다. 태권도는 단순한 스포츠 그 이상으로 한국을 알리고 한국의 정신과 문화를 홍보하는데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이다.

태권도 격파와 품새 등을 겨루는 콘테스트 영상은 전세계 스포츠인들의 축제처럼 풍성한 만남과 홍보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국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태권도 행사가 국내에만 머물지 말고 전세계를 순회, 공연하는 행사로 발전하면 더욱 태권도 세계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태권도는 음악한류와 함께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를 형성, 마케팅에서도 효과를 보고 있다. 말레이시아 관련 뉴스는 이를 입증하고 있다.⁴⁾

3) [출처] 태권도, 온두라스 공립 초등학교 정규과목으로 채택, 작성자 외교부, 2019. 2.

4) 신세계푸드 '대박라면' 말레이시아서 '대박'

3. 포용사회의 국내 문화소외계층

음악한류, 태권도 세계화 등과 대조적으로 국내에서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계층과 지역은 편차가 큰 것 같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각종 음악, 스포츠, 강연 등은 활성화 된 모습이다. 주민들은 자치단체나 백화점, 문화센터, 평생교육원 등에서 제공하는 풍성한 문화행사에 쉽게 접근, 선택의 기회가 많은 편이다.

그러나 지방, 그 중에서도 섬이나 농어촌 지역으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최근 미국의 뉴욕타임즈(NYT)는 한국의 시골이야기를 미국 독자들에게 소개했다.⁵⁾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9.04.29 17:34

25만개 한달새 완판… 추가 생산
6월부터 동남아 타 국가로 수출

신세계푸드가 동남아시아에서 매운 맛 라면으로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 신세계푸드는 말레이시아에 출시한 '대박라면 고스트 페퍼 스파이시 치킨 맛'(대박라면) 2차 생산분 25만개가 또 한달만에 완판됐다고 29일 밝혔다.

신세계푸드는 향후 말레이시아에서 계획보다 3배 많은 총60만개의 대박라면 고스트 페퍼를 판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말레이시아 판매가 종료되는 6월부터 타 동남아시아 국가로도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대박라면 고스트 페퍼는 할랄시장 공략을 위해 지난 3월 말레이시아에 선보인 한국식 할랄 라면이다. 가장 매운 고추 가운데 하나인 고스트 페퍼를 넣어 스코빌 척도(매운맛 지수)가 1만2000SHU에 이르며 이는 말레이시아에서 판매하는 라면 중 가장 맵다. 또 천연재료를 활용해 검은색으로 만든 면발은 시각적으로도 매운 맛에 대한 공포심을 준다. 특히 무슬림이 제품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자킴(JAKIM) 할랄인증을 받았다.(하락)

5) NYT에 등장한 '춤추는 한국 할머니들'(동아일보 4/28)

뉴시스입력 2019-04-28 07:28수정 2019-04-28 07:28

강진 대구 초등학교에 입학한 할머니들 소개
"한국, 아들만 교육 시키는 문화…문맹 여성 생겨"

미국 뉴욕타임즈(NYT)는 27일(현지시간) 초등학교에서 신나게 춤을 추는 할머니들의 동영상을 게시했다. 이들은 바로 전라남도 강진 대구초등학교에 입학한 늦깎이 학생들.

NYT는 한국의 출산율 저하로 폐교의 위기에 처한 시골의 초등학교들이 시골 여성들에게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2019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70살 황월금 할머니, 75살 박종심 할머니 등의 이야기도 자세히 다뤘다. 황 할머니는 60년 전 친구들이 학교로 달려가는 것을 지켜보며 나무 뒤에 숨어 눈물을 흘렸던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는 "마을 아이들이 읽고 쓰기를 배우는 동안 집에서 돼지를 키우고, 딸감을 모았다. 어린 형제들을 돌보는 것도 내 몫이었다."고 말했다. 여섯 명의 자녀 모두를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진학시킨 그는 "다른 엄

뉴욕타임즈가 한국의 폐교과정에서 일어나는 시골이야기를 소재로 기사화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과거 미국 등 유럽국가들은 한국같은 제3세계 국가에 대해 주로 4C (Crisis 위기, Catastrophy 재난, Coup 쿠데타, Corruption 부패)에 초점을 맞춰 뉴스를 보도한다는 비판을 받았다.⁶⁾

뉴욕타임즈는 한국 시골에서 폐교 위기에 처한 초등학교에 70대 할머니들을 입학시키며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 훈훈한 사연을 소개했다. 국내 언론에서는 시골의 혼한 모습이라 다루지 않았겠지만 여기서 눈여겨 볼 부분이 있다. 바로 강진 지역 같은 시골의 문화 소외현상이다. 시골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발제자의 고향, 울릉도를 사례로 문화 소외현상을 소개한다.

울릉도는 극장이 한군데도 없어 주말이 되면 학생들이 배타고 포항 나와서 극장을 가는 식이다. 2017년 패스트푸드점 롯데리아가 울릉도 역사상 처음으로 섬에 들어왔다. 폐교도 4개가 나왔지만 노인들을 위한 학교유지 방안은 논의조차 없다. 바다는 있어도 수영장은 없다. 여름 외는 수영을 할 수 없는 곳으로 스포츠 인프라를 논할 수조차 없다. 문화, 스포츠 등 시설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이를 운영하고 가르칠 전문 강사는 또 다른 차원의 난제다.

울릉도 존재의 중요성은 독도 때문에 더욱 강조되지만 여름에 잠시 관광객들의 휴식처로 인식될 뿐이다. 주민들을 위한 문화 인프라나 인력은 포용사회 문화혁신 프로젝트에서 여전히 벗어나 있다.

과거나 현재나 섬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일찍 부모 곁을 떠나야 하는 상황은 변한 것이 없다. 나이든 세대가 많아진 시골에 더 많은 문화시설과 프로그램 등이

마들이 하는 일을 할 수 없어서 늘 괴로웠다."고 인터뷰를 통해 말했다. 황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 그게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이다."고 했다.

그런 그에게 대구초교가 폐교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학생 유치에 나서면서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이주영 교장은 "1학년으로 입학할 소중한 학생을 찾아 온 마을을 뒤졌지만 한 명도 없었다."면서 "9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학교를 위해 묘책을 세웠다. 읽고 쓰기를 배우고 싶어 하는 나이든 마을 사람들을 입학시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황 할머니는 "입학식 날 울었다. 이게 실제로 내게 일어난 것인지 믿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박 할머니는 마을의 문어잡이 선수다. 하지만 최근엔 수업에 뒤처질까 노심초사하는 학생이 됐다.

그는 "기억력도 떨어지고 손이랑 허도 내 맘 같지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죽기 전에 글을 다 배울 거다. 주민센터에 가면 내가 어떤 심정인지 아무도 모른다. 공무원들은 나한테 서류를 주면서 작성하라고 하는데 나는 이름 밖에 못 썼다."고 그간의 어려움을 털어놨다.(하락)

6) UN의 산하기구 유네스코에서 80년대와 90년대 미국, 영국 등 서방국가들이 뉴스와 정보를 독점하면서 제3 세계에 대해 주로 재난과 위기, 쿠데타 등 소위 4 Cs를 주로 다룬다는 비판이 있었다. 뉴스와 정보의 일방적 흐름 속에서 뉴스식민지화, 서방의 우월적 시각의 고착화 등이 지적사항이었다.

절실한데도 모든 것은 서울과 대도시에서 집중돼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활성화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포용사회를 이루려는 야심찬 기획과 실행은 국내 지역단위에서 자치단체와 협업체제를 구축,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다.

- 섬이나 시골지역은 지하철이 없어 65세 이상 노인들은 공짜 지하철은 구경도 못해본다. 보편적 복지혜택에서 노인이 되어도 배제된다.
- 수영은 생존무기로 초등학교에서 필수로 배우는 과목이지만 섬에서는 실내 수영장이 없어 여름철 바닷가에서 스스로 배워야하는 열악한 환경이다.
- 유명 가수나 스포츠 스타, 인기 연예인 등은 섬 아이들에게도 우상이지만 실제로 한번 만나는 꿈을 실현시킬 수가 없다.
- 유명 전문강사, 가수나 연예인 등은 섬지역에 오는 부담으로 고액의 개런티를 요구하고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자치단체나 행사주관단체는 초청을 포기하거나 대안을 찾는 식이다.

III. 결론 - 향후 정책방향

문재인대통령 100대 공약중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확산'은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공약실현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분야다.

방송제작 분야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표준계약을 만들어 공정한 영상제작 환경을 개선하는 등 가시적 성과물들이 나오고 있어 다행스럽다. 해외 방송사들과 협업이나 공동제작, 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등 한류확산을 위한 기본 작업들도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분야별로 향후 정책방향을 일반 문화 소비자 입장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1. 세계를 즐겁게 하는 음악한류

세계 곳곳에서 음악, 문화 한류를 접촉하기 위해 섭외를 시도하지만 어디에 누구와 문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답답해한다. 기획사나 개인에게만 맡기기보다 기획사, 대사관, 문화원 등을 총괄, 한류문화센터(가칭)에 문의하도록 창구 일원화하여

온라인으로 연중무휴, 최소한 5개 국어로 24시간 정보제공서비스를 하도록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의한다. 한류스타들을 초청하는 데는 고액의 개런티가 필요한 만큼 국가별로 초청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신남방정책의 대상인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에서도 한류스타들의 공연을 직접 보고 싶어 하지만 매우 제한적이다. 지역별로 급지를 구분, 기획사나 한류스타들에게 개런티 세제혜택을 통해 방문을 독려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2. 스포츠를 넘어 문화강국의 대표브랜드, 태권도

태권도 세계화는 인프라가 이미 잘 구축돼 있어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운영과 그 운영의 주체를 명시하면 될 것 같다. 국기원과 태권도 공원, 세계태권도연맹(WTF) 등은 각 다른 조직이지만 태권도 세계화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이들을 총괄, 효율적, 협업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컨트롤 타워 구성에는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도 포함되어야 한다.

세계에서 한국에 여행겸 태권도 유학, 실습, 견학하고자 하는 수련생들이 차고도 넘치는데 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지원정책이 절실하다.

태권도시범단 운영을 확대, 상시화 할 것을 제안한다. 태권도 프로시범단의 또 다른 한류전파의 한 기둥으로 세계에서 환영받고 있다. 현지 태권도 사범과 단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현지 방송사 등과 사전협의 등을 거쳐 초청국가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시범단을 보내는 식이다. 프로시범단은 분야별로 격파, 품새, 겨루기, 종합 등을 나눠 모집하고 필요할 경우 팀별로 인센티브제를 도입, 경쟁을 유도할 수도 있다.

국가별로 올림픽 등 태권도 세계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그 나라 태권도 영웅들을 무주 태권도공원에 초청, 태권도의 역사와 정신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혜택을 베풀어줄 것을 제안한다. 이들은 한국을 홍보하고 태권도로 평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3. 포용사회의 국내 문화소외계층

문화 강국과 포용사회를 지향하는 현정부에서 지역별 문화수준의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먼저 실감하는 것이 급선무다. 지자체와 협의도 잘 안되고 재정지원을 해도 문화수준을 높이는데 제대로 사용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된다. 한 가지만 제의하고자 한다. 문화소외계층에 지역별로 가장 절실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중 한가지씩만이라도 하라는 주문이다. 지역에 시설지원은 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시설도 종종 확인된다. 일일이 점검하여 무엇이 무용지물이 됐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확인하고 지역별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그들의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전조사를 객관적으로 해서 정책에 반영할 것을 제의한다.

2019 포용적문화국가포럼

제3세션 주제토론

좌 장

박영정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장

토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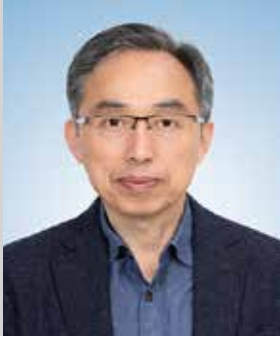
김 진 |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은실 |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양재진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섿별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최현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통계센터장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장

2018 ~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장
2018 ~ 현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비상임이사
2009 ~ 현재 한국예술경영학회 부회장/상임이사
2015 ~ 현재 한국문화경제학회 이사
2017 ~ 2018 문화체육관광부 새문화정책준비단 위원

주제토론

01

지정토론

김 진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지정토론



김진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0 ~ 현재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9 ~ 현재 한국문화경제학회 부회장

2010 ~ 현재 한국문화경제학회 이사

2003 ~ 201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2019 포용적 문화국가 포럼

2019. 5

김진

동덕여대 경제학과

2

I. 정리 및 의견

◆ 이태수, “국가비전으로서 혁신적 포용국가”

- 혁신적 포용국가 국가비전을 제시하면서 전략7, ‘인적자본의 창의성 및 다양성 증진’에 문화정책을 접목시킴
- 문화정책의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을 제시하였으나, 과연 새로운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문화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비전의 전략목표체계에 문화정책의 위상이 자리매김하지 못한 상황이고, 전략과 수단의 부조화가 현격하며, 문화나 정책의 개념정리화(definition refinement)의 필요성을 노정시켰다는 점이 주목할 만함

◆ 김창룡, “혁신적 포용국가 담론에서 본 문화정책”

- 한류, 태권도, 문화소외의 영역을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 담론을 문화정책에 적용하려는 시도로 보여짐
- 내용이 사례적이라 하더라도 구체성과 대표성 측면에서 빈약하고 특히 18-20쪽에 제시된 정책과제는 좀 더 개선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되나, 국가비전과 문화비전의 매칭의 어려움을 진술하게 노정시킴에 유효성이 있음

3

I. 정리 및 의견

- ◆ 이동연, “문화비전 2030에서 바라본 혁신적 포용국가”
 - 혁신적 포용국가 국가비전의 3대 비전과 9대 과제를 바탕으로 7가지 문화정책 패러다임 전환 키워드를 발굴하고, 이를 이용하여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의 3대 가치와 9대 의제를 도출하면서 4가지 실행시 문제의식을 제 공함
 - 저자가 제시한 ‘문화의 통합적 역할과 가치지향적 의제 발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사례가 필요함
 - 물론 정책 초기 단계이고 혁신적 포용의 담론화가 더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이에 대한 모범사례를 문화분야에서 발굴할 필요성이 상존함
 - 저자가 제시한 ‘돈을 써야 할 것과 돈을 벌어야 할 것에 대한 장기적 기획과 전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함
 - 4가지 실행과제 또는 실행시 문제의식을 진행할 때 더 자원, 인력, 노력이 수반되겠으나, 9대 의제를 수행할 때에도 어마어마한 자원, 인력, 노력이 투자되어야 함을 공유하여야 함

4

II. 질문 및 코멘트

- ◆ 혁신적 포용국가와 문화정책의 역할?
 - 혁신성과 포용성의 담론화에 대하여는 논의할 단계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사상함
 - 포용성의 측면에서 대표적인 영역으로 문화가 필요한가의 문제
 - 과연 그 동안 문화정책이 유력하고 유효하였는가의 문제
- ◆ 인적자본의 창의성 및 다양성 증진에 대한 문화정책의 역할?
 - 창의성과 다양성 증진의 상충관계는 없는가?
 - 문화정책 이외의 사회정책 및 교육정책을 논하지 않았는지?
- ◆ 다양한 용어들의 개념화 및 공유가 가능한가?
 -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개념들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포용, 공정, 상생, 감정 등이 나오는데 권리의 부족에 대한 일종의 특례화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개념을 자체에 대한 대체를 의미하는지?
 - 문화의 개념은 어떠한가?

5

II. 질문 및 코멘트

- ◆ 김진(2018)은 문화와 경제성장에 대한 기존연구를 국가문화접근법, 창의산업접근법, 그리고 문화경제이론접근법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문화경제연구의 하나의 분야로서 ‘문화와 경제성장에 대한 연구’에 대해 방법론을 부분적으로나마 제시함
- ◆ 이론 및 실증 분석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 사실(highlighted facts)**을 제시할 수 있음
 - 첫째, 문화경제성장에서 논의하는 문화는 정신문화 또는 국가문화라는 추상적인 것과 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 자체를 나타내지는 않음
 - 둘째, 문화지출 또는 문화재정이 문화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문화라고 칭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음
 - 셋째, 문화는 일종의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고 일종의 투자활동이고 대부분 생산이나 생산성에 기여하지 않는(un-useful) 여가활동일 수도 있음
 -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활동으로부터 창의성 제고 및 확산 등을 통해 경제성장이 장기적 관점에서 발생하리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6

감사합니다.

제3세션

주제토론

02

지정토론

박은실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 메 모 >

지정토론



박은실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 2000 ~ 현재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 2018 ~ 현재 국회미래연구원 자문위원
- 2017 ~ 현재 국무총리직속 세종시지원위원회 위원
- 2015 ~ 201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추진위원
- 2010 ~ 201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제3세션

주제토론

03

지정토론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정토론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16 ~ 현재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
 2003 ~ 현재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 행정학과 조교수.부교수.정교수
 2013 ~ 2015 연세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소장
 2011 ~ 2013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학과장
 2009.01 ~ 2010.02 미국 UC 샌디에고 AKS-KPP 초빙교수

“국가비전으로서의 혁신적 포용국가”에 대한 토론

양재진(연세대학교 행정학과)

- 이태수 단장님의 “혁신적 포용국가론”의 한국사회 문제점 진단과 비전에 대해 대부분 공감. 큰 이견이 있을 수 없음. 그러나, 큰 그림을 제시하다 보니, 한국 사회보장의 취약성 그리고 상향이동성이 미흡한 원인에 대한 분석과 보다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이루어지지 못함. 원인과 정책대안을 보완하는 토론을 하고자 함.

1. 왜 사회보장이 미흡한가?

- 소득보장 미비: 중산층은 낮은 급여 때문에 + 저소득층은 사각지대 때문에
- a. 실업이나 퇴직 시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바로 추락 → 중산층 몰락/양극화에 일조
 - b. 산업 구조조정 저항 (“해고는 살인!”) → 산업경쟁력 저하, 경제비효율 증가
 - c. 사회보험에 비해 가성비 낮은 민간보험 의존 → 복지국가에 대한 정치적 지지 기반 침식
-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명목소득대체율이 높지 않고, 급여 상한 등이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기에, 평균소득 이상의 중산층의 소득상실에 대한 실제 보상 수준은 매우 낮음.
- 노후소득보장의 경우, 국민연금의 실 급여는 매우 낮음. 이는 낮은 보험료율, 낮은 보험료부과소득상한 (2019년 현재, 월 460여만 원), 짧은 가입기간 등에 기인함.
 - 그나마 저부담-고급여체제여서 초기 가입자들에게는 기여액보다 높은 급여가 보장되나, 절대적인 급여수준은 여전히 낮음.
 - 평균소득 이상을 버는 중산층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내재된 소득재분배 기능과 낮은 보험료부과소득상한으로 인해 실제 소득대체율은 크게 떨어짐.
 - ✓ 권문일(2015)에 의하면, 가입자 평균소득이 아닌, 5인 이상 사업장 상용근로자 평균임금이 개인의 생애평균 기준 소득월액이라 가정할 경우,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했을 때 소득대체율은 약 31%.
 - ✓ 평균소득 이상의 중산층의 경우 40년 가입해도 소득대체율은 20%대로 예상.

<표 1> 소득수준별 연금소득대체율 국제비교

	중위 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중위 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0.5	0.75	1	1.5	2
남자							남자()						
호주	45.7	67.0	50.0	41.6	33.1	28.9	뉴질랜드	45.6	77.5	51.6	38.7	25.8	19.4
오스트리아	80.1	80.1	80.1	80.1	76.4	57.3	노르웨이	59.6	66.2	61.0	59.3	49.8	42.2
벨기에	42.4	58.1	43.1	42.0	32.5	24.3	폴란드	61.2	61.2	61.2	61.2	61.2	61.2
캐나다	50.2	76.5	55.2	44.5	29.7	22.2	포르투갈	54.1	63.0	54.3	53.9	53.1	52.4
체코	54.9	79.2	59.6	49.7	36.4	29.0	슬로바키아	56.4	56.4	56.4	56.4	56.4	56.4
덴마크	88.0	124.0	94.9	80.3	67.5	63.7	스페인	81.2	81.2	81.2	81.2	81.2	66.7
핀란드	56.2	66.5	56.2	56.2	56.2	56.2	스웨덴	61.5	76.6	64.6	61.5	75.6	81.3
프랑스	53.3	61.7	53.3	53.3	48.5	46.0	스위스	62.0	62.5	62.1	58.3	40.5	30.4
독일	43.0	43.0	43.0	43.0	42.6	32.0	터키	86.9	86.9	86.9	86.9	86.9	86.9
그리스	95.7	95.7	95.7	95.7	95.7	95.7	영국	33.5	51.0	36.6	30.8	21.3	16.0
헝가리	76.9	76.9	76.9	76.9	76.9	76.9	미국	40.8	50.3	42.6	38.7	34.1	28.8
아이슬란드	91.7	108.3	93.0	90.2	87.5	86.1							
아일랜드	39.8	68.4	45.6	34.2	22.8	17.1	OECD	60.8	72.2	62.7	59.0	54.3	50.0
이탈리아	67.9	67.9	67.9	67.9	67.9	67.9							
일본	35.7	47.1	38.3	33.9	29.4	26.6	여자						
한국	45.1	64.1	49.4	42.1	33.6	25.2	이탈리아	52.8	52.8	52.8	52.8	52.8	52.8
룩셈부르크	90.1	99.4	91.9	88.1	84.3	82.5	멕시코	32.5	55.3	36.8	29.9	28.6	28.0
멕시코	36.9	55.3	37.6	36.1	34.5	33.7	폴란드	44.5	49.0	44.5	44.5	44.5	44.5
네덜란드	88.9	93.4	90.0	88.3	86.6	85.8	스위스	62.6	62.8	62.6	59.0	41.0	30.7

자료: OECD(2009)

- 퇴직(연)금이 사실상 강제화 되어 있고, 국민연금의 부족한 소득대체율을 보완해주기를 기대하나,
 - 종신�형 지급이 사실상 어려워, 개인의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에 대한 보험기능은 미미.
 - 저축기능이 기대되는 데, 이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이 지연되고 있어, 실제로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
 - 게다가 현재 퇴직연금의 급여지출의 90%가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고 있어, 연금으로서의 기능이 매우 취약함.

- 실업보상의 경우, 가입기간동안 기본급 평균의 50%만을 받을 수 있고, 기간도 10년 가입해야 최대 210일에서 240일(50세 이상의 경우)동안 수급가능함.
 - 이무리 급여가 높았어도 실직자가 받을 수 있는 1일 최대 지급액이 6.6만원(2019년 현재)
 - 최저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인 6만120원.
- 육아휴직 급여도 월 상한액이 최초 3개월은 150만원, 이후는 120만원에 묶여 있음.
- 사회보험에 포괄되지 못하는 빈곤층을 위한 공공부조가 매우 취약. 특히 근로무능력자인 저소득 노인에게 대한 최소한의 소득보장이 매우 미약.

*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노인에게는 너무나 가혹함 (주거재산 1.04%/월, 일반재산 4.17%/월, 금융재산 6.26%/월, 승용차 100%/월). (주거)재산의 기본공제액도 너무 낮음: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높은 소득환산율은 자조의 정신 하에 국가에 의존하기 보다는 먼저 재산을 처분하고 소득활동에도 나서서 생활비를 마련하라는 취지로, 이는 신체 건강한 근로연령대 수급자의 복지의존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음.

* 그러나 근로를 통한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노인에게 이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가혹. 노인들에게 거주할 집과 일정한 금융자산은 안전과 질병, 배우자 장례 등 위기 시 마지막 버팀목. 이를 다 처분하고 얼마 안 되는 급여로만 생활하라는 것은 노인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후에야 기초생계보장하겠다는 뜻.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154)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근로연령대 빈자와 노인을 함께 묶어 놓았기에, 수급기준이 근로연령대 빈자 때문에 매우 엄격함. 양 집단을 분리하여, 스웨덴처럼 노인용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는 기초보장연금을 만들어야 함(느슨한 자산조사, 느슨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기초연금도 기초보장연금에 흡수통합.

2. 왜 사회적 상향이동성이 저하되었는가?

- 노동시장의 이중성 심화 + 적극적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정책의 미약 때문에
 - a.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사회적 불평등을 낳을 수밖에 없음. 노력과 혁신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이에 더해 사회적 이동성이 열려 있으면, 불평등이 존재해도 사회적 통합성이 유지됨.
 - b. 반대로, 공정한 보상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사회적 이동성도 저하되면 사회통합은 유지되기 어려움.
 - c. 우리나라는 불평등을 낳은 4대 요인(아래 박스 참조) 중에 국가가 최소한 ① 사회적 차별(discrimination), ② 사회경제적 여건의 불평등(social background inequality)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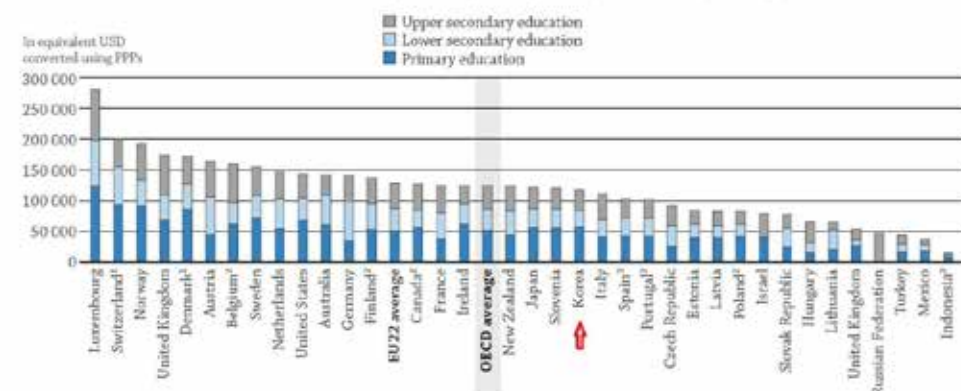
불평등의 원인으로는 ① 사회적 차별(discrimination), ② 사회경제적 여건의 불평등(social background inequality), ③ 자연적 우발성에 따른 불평등(Natural endowment inequality), 그리고 ④ 성실성과 삶의 방식의 차이(differences in effort and lifestyle choice)를 들 수 있다. 이 중 전통적인 자유주의자들은 ①만을 제거하여 소극적인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려는 데 반해, '제3의 길'을 주창하는 사회투자론자들은 ②에 개입하여 저소득 가정의 아동과 청년, 그리고 여성의 기회평등 기반을 확대하려 한다. 그리고 ③까지 개입하여 장애인 등에게 보다 적극적인 삶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도 목표로 삼는다. 전통적 평등주의의 입장에서는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고자 ④로 인한 불평등도 보정해 줘야 하나, 사회투자적 관점에서 볼 때 ④로 인한 불평등은 용인한다(White, 2004: 32).

- 공보육은 저소득층 자녀도 유아기 때부터 중산층 아이와 동일한 수준에서 건강과 인지능력 그리고 성취동기를 키울 수 있는 기회의 부여를 의미하기에 적극적 기회의 평등 차원에서 매우 중요.

- 최근 공보육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나, 교사1인당 유아수가 17.1명에 달하고 (OECD 평균은 14.4명), 3세 이상의 경우 법정 교사 1인당 유아수가 20명에 이르는 문제를 안고 있음.

○ 학령기 공교육에 대한 투자가 미흡함.

<그림 1> 학령기 학생1인당 교육기관 교육비 지출



자료: Education at a Glance (2017: 172)

- 평생직업교육 차원의 적극적노동시장정책(ALMPs)의 경우도, 2010년 현재 GDP대비 0.3% 지출 수준으로 절대 규모가 작고 (OECD평균은 0.6%), ALMPs의 핵심인 훈련이나 고용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아닌 대부분 (저급의) 공공일자리 창출(direct job creation)에 치중하고 있음.

<표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분야별 지출 비중 국제비교

(단위: %)

국 가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고용장려금	직접적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기 타 ¹⁾
대한민국	2.7	17.2	5.0	67.3	0.2	7.6
네덜란드	35.5	11.0	0.6	13.6	0.0	39.3
독 일	40.2	32.5	10.2	5.1	8.3	3.7
스웨덴	29.7	8.2	39.4	0.0	2.0	20.7
미 국	32.7	33.4	6.0	4.2	0.0	23.6
일 본	19.3	26.3	37.5	16.9	0.0	0.0
덴마크	26.8	21.7	16.7	0.0	0.0	34.8
프랑스	26.7	33.3	9.5	19.1	4.8	6.5
OECD 평균	26.0	28.5	16.0	12.5	5.1	11.9

주: 1) 전환배치 및 일자리 나누기(job rotation and sharing), 고용유지 및 재활(supported employment and rehabilitation).
자료: OECD Database.

자료: 박동현 (2015: 30)

3. 지속가능한 포용국가를 위한 전략은?

- 한국복지국가의 사회보장 강화를 위해 공공복지 확대 기초를 갖되, 작은 복지국가를 만들어 낸 정치경제적 조건과 저성장/저출산고령화 등의 비우호적인 구조적 변동을 감안하여 사회정책 발전전략을 짜야함.

- 일본식 Debt-financing을 통한 사회지출 확대를 답습할 것이 아닌 이상, 기존 사회보장제도는 물론 공·사 복지재원의 합리화가 필요.

-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합리화를 통해 추가 소요비용을 최소화하고,
- 민간의 사회복지성 지출을 공공복지지출로 전환하여 전체 사회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연금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규모가 큰 기존 재원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전액부담하고 있는 퇴직(연)금 부담분 (월 통상임금 총액의 8.33%)이 있음
- 합리화 노력과 병행하여, 필요한 추가 소요는 사회복지 목적세인 사회보험료의 인상을 통해 마련하고, 일반조세는 경제활동의 왜곡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반 소비세(부가세)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소득세는 소득세의 누진구조를 활용하여 (세율인상이 없이도) 발생하는 자연증가분을 최대한 활용.

- ✓ 소득세의 경우, tax buoyancy 효과가 큼. 즉, 물가상승에 따른 과표조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세율을 높이지 않더라도 또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명목소득 증가에 따라, 면제자가 축소되고 많은 사람들이 누진구조의 상단으로 이동하게 되어 세수가 크게 늘어남.

- 기존 복지제도의 합리화와 복지확대가 고용증대와 고용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사회투자형으로 설계 되어, 중장기적으로 경제와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도록 해야함.

- 사회정책이 출산율을 높이고, 비활성화된 노동력을 활성화(activation)시켜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고,
- 경제활동참여인구의 직업능력을 높여 유연한 노동시장에서도 고용안정(employment security)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하며,
- 사회적 이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아동의 발달기회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사전예방적 복지를 강화해야함
-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강화되면, 세원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음

4. 소득 보장 부문, 정책방향은?

- 누구나 근로할 수 있게
- 성실히 근로한 자는 위험에 처했을 때, 근로 시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 소득비례 급여 원칙의 실현이 필요)
- 스스로 돕지 못하는 저소득자에게는 시민권적 차원에서 기초보장이 제공되어야.

1) 실업 급여

- 정부 개정안대로 소득대체율 50%에서 60%로 인상해야.
- 더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 상한선 인상: 하루 10만원, 월 300만까지 인상

2) 육아휴직 급여

- 소득대체율 인상: 50% → 60%
- 급여상한 대폭 인상 (월 120만원 상한 → 상한 월 250)
- * 부모보험 도입으로 체계화 할 필요 있음.

- 스웨덴처럼 부모보험(Parental Insurance)을 도입하여 보험기금에서 출산/육아휴직 급여가 지출되게 하여,
 - 여성을 고용한 고용주의 추가 부담 없이 출산을 앞둔 산모나, 출산 후 부부 중 1인은 12개월 동안 큰 소득단절 없이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게 하고,
 - 직장 복귀 후에는, 공보육시설(어린이집)을 이용토록 보육시스템을 합리화 해야함.
 - ✓ 0세아는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
 - ✓ 공보육을 통해 빈부/문화 격차를 최소화하며 아이들의 출발선을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기에, 인지능력이 발달하는 시기부터는 어린이집에서의 양육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사회적 이동성의 제고를 위해서도 바람직함.
-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소득상실이 커지게 되면 출산을 포기하는 경향이 큰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출산/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은 60% 수준을 목표로 설계.
- 성별 불문하고 45세까지의 모든 근로자와 고용주는 부모보험료를 납부하고, 부모보험기금에서 출산/육아휴직 급여 외에도, 자녀 간호급여, 결혼 축하금 등을 지급함.
 - 출산/육아휴직 급여를 개별 고용주의 의무로 하지 않고, 기금을 통해 지급하는 것은 고용주의 여성고용회피 유인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 모든 근로자에게 보험료 납부를 의무화하는 것은 결혼의 비용과 출산으로 인한 소득상실의 위험을 최대한 사회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함임.
- 부모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노-사에게 공히 새로운 보험료 부담이 생기나, 아래의 기존 재원을 활용하면, 노-사의 보험료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현재 고용보험에서 지원되고 있는 육아휴직수당과 출산휴가급여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
 - 국고에서 지원되는 0세아 무상보육료(종일반 1인당 월 약 88만원: 부모보육료 441,000 기본보육료 437,000, 맞춤형 1인당 약 84만원: 부모보육료 344,000 기본보육료 437,000 긴급보육바우처 60,000),
 - 그리고 부양가족(아동)공제의 축소 내지 폐지로 생기는 조세지출 절감액을 부모보험에 투입.
- 부모보험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될 경우, 휴직기간 중 어린이집 이용은 100% 본인 자부담해야.
- ✓ 현재는 육아휴직자가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등 이중혜택으로 국고낭비.
- 전업주부는 공보육시설을 하루 4시간만 무료하게 하고, 어린이집 이용 시 누구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하여 과수요 억제해야
- ✓ 소득수준에 따른 슬라이드제 도입으로 저소득층의 이용을 저하 방지

- ✓ 아동수당도입과 함께 본인부담금 도입해야
- 육아수당은 저소득 여성의 근로동기를 저해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현 수준에서 급여 수준 동결.
- 부모보험의 도입으로 인한 육아휴직은 확산은 일자리 나누기 효과와 청년고용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부모보험이 도입이 되면, 출산전후유급휴가의 활용률이 높아지고 실제 휴가기간도 현재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이 때, 유급휴가 비용이 사회화되는 만큼, 기업의 대체인력 고용을 의무화하여 단기간일지라도 청년 등에게 고용의 기회를 높이고,
 - 취업자의 직장 내 교육훈련(OJT)의 효과가 발생하게 해야함.
- ✓ 신규취업자는 유급휴가기간만 채용되는 것이지만,
- ✓ 이로 인해 자연스레 형성된 경험과 기술은 재취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될 것임.

3) 노후소득보장

-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보험료 인상.
- 보험료 인상분 퇴직(연)금 전환금제 부활로 충당 (퇴직(연)금 전환분은 100% 소득비례 산식 적용하여 A값 비중 축소)
- ✓ 김영삼 정부에서 1993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3%에서 6%로 인상했을 때, 그 분담 비율을 사용자 2%, 피용자 2%, 그리고 퇴직금전환금 2%로 한 바 있음 (1999년 4월 까지 시행).

- 퇴직(연)금 전환금제 부활 하지 않을 경우,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스웨덴처럼 퇴직연금 보험료 징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도록 하여 운용관리수수료를 대폭 절감케 + 기금운용수수료도 비교 공시 뿐만 아니라 직접 개입하여 억제토록 ⇒ 복리효과로 인해 퇴직연금 급여액의 인상 효과.

- 카드 수수료도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면서도 사적 연금 관련 수수료 규제를 방기하고 있는 것은 관료와 정치권이 업자들에게 포획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음. 국가는 개인연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고 퇴직연금은 세제혜택에 사실상 강제화하고 있어 금융 산업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기는 만큼, 국가는 사적 연금시장에 개입해 국민들의 실질 연금급여률을 높여야 함

“2013년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 4.2%인데,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평균 2.3%였음. 퇴직연금의 수수료로 최대 1.4%를 떼고 나면, 일반적금융상품보다도 낮은 수익임” (조선일보, 2014. 8. 11).

“20~30대 직장인이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해 원금보장형으로 자금을 운용하더라도 30년이 지나면 납부하는 총 수수료가 원금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연합뉴스가 한국납세자연맹과 함께 개인형 적립식 IRP(이하 IRP) 상품의 수익률 시뮬레이션을 분석한 결과, 30세 직장인이 원금보장형 IRP 계좌에 300만원을 1회 불입하고서 연금개시 시점인 60세까지 자금을 묻어둘 경우 30년간 납부해야 할 총 수수료 금액이 57만3천원인 것으로 집계됐다....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으로 돌려받는 환급금 39만6천원(세액공제를 13.2%)보다 큰 금액이다 (연합뉴스, 2015.03.09.).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수료 비교 (매년)>

구분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근로복지공단	부담금(보험료)의 0.3%	적립금의 0.3%
민간 퇴직연금사업자	적립금의 0.3~0.7%	적립금의 0.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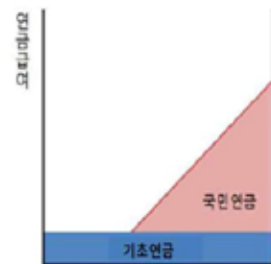
* 국민연금은 적립금대비 총 운용/자산관리운영비는 매년 0.1%에 불과

자료: 근로복지공단 (2012),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3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가능”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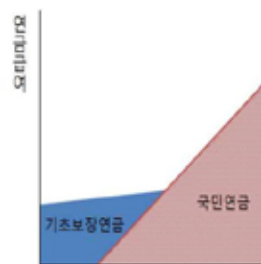
- 기타 퇴직연금의 수수료율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1) 운용관리수수료는 적립금 규모에 연동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복지공단처럼 부담금의 일정율로 바꾸거나, 2) 적립금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비율로 수수료율을 하락시키도록 규제하거나, 3) 오바마 헬스케어 개혁 초기에 제시되었던 public option의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금융회사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수수료율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a.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상품에 30인 이상 사업장도 가입가능하게 함.
- b.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 상품 취급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대상이 동일하고, 자산운용은 국민연금기금운용과 동일하게 하면, 국민연금관리운영비 수준에서 퇴직연금을 운영할 수 있음)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수당식 기초연금제를 확대하기 보다는, 스웨덴에서 채택하고 있는 보충급여형의 기초보장연금제도 (혹은 기초소득보장제도)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함.
- 기초보장연금은 보충급여형이기에 동일한 재원하에서도 기초보장선을 기초연금보다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기초보장연금은 보충급여형태로 운영되기에, 앞서 제시된대로 공적연금의 적용이 광범위하고 급여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이에 비례하여 기초보장연금의 재정지출이 최소화됨.
- ✓ 아래 <그림 2>에서 보듯, 동일한 재원(기초연금 면적과 기초보장연금의 면적은 동일)을 가지고도 은퇴노인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노후 소득보장 수준을 약속할 수 있음.

<그림 2> [국민연금+기초연금]과 [국민연금+기초보장연금]의 비교

< 현행국민연금 + 기초연금 >



< 개혁후 국민연금 + 기초보장연금 >



자료: 양재진 (2012a)

- 기초보장연금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한 원리로 운영
- 다시말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65세 이상 노인은 분리하여 운영 (근로무능력자인 만큼, 느슨한 자산조사와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5. 사회적 상향이동성의 제고는 어떻게?

1) 차별 시정

- 고용차별(employment discrimination)은 고용에 있어 기회의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 국적, 신앙, 성별, 연령, 장애, 학벌, 종사상의 지위(정규직-비정규직) 등에 따라 취약계층이나 소수자가 채용, 승진 등 인사관리상 차별을 받지 않게 해야함

2) 아동빈곤 방지와 아동에 대한 투자

- 미래 인적자본인 아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책적 관심을 보여야.
- 특히 저소득 가정의 아동에게 실질적 기회의 평등과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아동복지서비스가 대폭 강화되어야
- 이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공보육의 내실화임
- 이에 더해 취약계층취약지역의 아동 및 청소년복지서비스의 강화(유아교육, 방과후 프로그램, 공부방, 학자금융자 제도 확대, 이주자와 다문화가정 정착프로그램)이 필요

3) 학령기 공교육 강화

- 초.중은 물론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 학급당 인원 대폭 축소
- 외국어/문화/컴퓨터 Divide생기지 않게, 영어.중국어 등 어학교육 + 예체능 +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교육 강화
- ✓ 중산층 가정 아이가 사교육을 통해 받는 영어, 중국어, 악기, 스포츠 교육을 공교육에서 질 높게 실시해야함
- ✓ 그래야 저소득 가정의 아동도 중산층 가정의 아이와 동일한 자기개발 기회를 가짐

4) 평생교육/훈련 강화

-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지출 배분 조정 (공공일자리창출 축소 + 훈련/고용서비스 증액)
- ✓ 영세/중소기업주에 대한 각종 보조금을 근로자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해야
- 전문대/구)산업대 (**과학기술대)의 평생직업교육기관화 (고용보험과 연계 수당지급, 등록금 100% 무상 ← 무차별적인 반값등록금제도는 축소)
- 근로자에게 훈련/교육을 위한 휴직/퇴직/근무시간 단축 권리 부여 + 실업급여(일부) 지급
- 생애주기에 걸쳐 교육/훈련이 보상 받도록 (즉, 교육 프리미엄이 늘 작동하도록) 연공급이 아닌, 직무급 체제로 전환이 필요.
- 민간대기업/공기업 vs. 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 (임금 가이드라인 정책 부활 필요 + 공무원/공기업 직무급제로 개편 선도)
- 유연한 노동시장 만들고, 대신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

지정토론



최섫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001 ~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015 ~ 2019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문화예술행정 전공주임

2016 ~ 현재 한국문화사회학회 『문화와사회』 편집위원장

2016 ~ 현재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편집위원

2019 ~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논총』 편집위원

통합과 연계의 새로운 문화정책 연구를 위한 제언

최섫별(이화여대 사회학과)

I. 들어가며 : 한국 문화정책, 위기인가 기회인가?

한국사회에서 문화 분야는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하여 국가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문화가 정권의 정당성 확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문화 개념과 가치체계의 오남용, 추상적이고 모호한 대상 설정, 국민적 합의 없는 하향식 문화행정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왔다. 한국 문화정책을 둘러싼 작금의 상황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으며, 따라서 압축적 성장의 과정에서 놓쳐왔던 부분들에 대해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II. 한국 문화정책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 그리고 이에 대한 제언

○ 문화정책의 정체성: '문화'정책인가 '예술'정책인가 '문화예술'정책인가?

문화정책의 개념 정의와 문화정책 영역 간 경계 설정에 있어서의 모호성은 문화정책의 공급자와 수요자, 그리고 이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문화'라는 개념이 갖는 다양성과 복잡성이 자리한다(이병량 2004; 2007; 홍기원, 2009). 예술문화, 민족문화, 생활문화, 다문화, 문화산업 등 문화정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들만 보아도 각각에 담겨 있는 문화의 개념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문화예술의 진흥에서 문화기반 확충, 여가 프로그램 운영, 민족문화 창달, 언어정책 및 국어 관련 종합계획 수립·추진, 문화복지 및 문화향유 활성화, 지역문화발전과 문화도시의 조성, 국제 문화교류 및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이르기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를 통해 문화 개념의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박광무, 2013; 문화체육관광부, 2014). 나아가 문화정책의 영역이 산업, 복지, 교육, 지역, 외교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도 문화정책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 문화정책에 내재된 문화개념 및 범위의 모호성 문제를 극복하고 한국 문화정책에 대한 통합된 이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문분야에서의 문화 및 문화정책 관련 학술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다학문적 문화이론들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적 시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론과 정책의 통합적 모형 개발로 문화정책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제간 연구를 활성화시켜 문화정책과 정책 연구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형성하여야 한다. 문화정책 개념 및 범위의 정립과 이론적-정책 통합적 모형 개발을 통해 그 동안 이론적, 철학적 논의 없이 빠르게 형성되어 온 한국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문화국가를 향한 한국적 틀을 견지하여야 한다.

○ 문화정책의 방향성: '문화의 민주화'인가 '문화 민주주의'인가?

오늘날 다양한 종류의 원리와 가치들을 표방하고 있는 문화정책들은 그 나름의 고유한 역사와 형성배경을 가지고 있다. 가령, 프랑스와 영국의 문화정책은 해당 국가들이 견지해 온 강한 중앙집권적 성격과 자유방임주의 원칙에 기반한 '문화민주화'와 '팔길이 원칙'을 모태로 하여 탄생했으며, 문화사회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의 '문화이론'과 영국의 '문화연구'와 같은 학문 분야에서 생성된 다양한 문화 담론과의 조화를 통해 발전해 왔다. 최근 국제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문화민주주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이들 국가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에 대한 열띤 논쟁의 과정을 거쳤다¹⁾.

이처럼 서구 국가들의 문화정책은 특수한 국가적 맥락과 역사적 상황 아래 진행된 치열한 정치적·사회적 논쟁과,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심도 있는 학문적 논의 속에서 독특한 지형을 그리며 발전해 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문화정책의 역사가 짧은 한국의 경우, 문화부가 신설된 1990년부터 '문화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 '팔길이 원칙' 등 상이한 이념적, 철학적 기반을 가진 문화적 원리와 가치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입해 정책 현장에 도입함으로써, 충분한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학문적 논쟁과 논의의 시간을 거치지 못했다. 몇몇 연구자들이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가치와 이념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김여수, 1988; 박종국, 1988; 정갑영, 1994; 정홍익, 1993), 여전히 한국 문화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문화정책들이 분명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국 문화정책사에서 시행되어 온 문화정책들의 다양한 학술적 뿌리를 검토하고, 이 작업을 통해 각각의 문화정책들이 담지하고 있는 원리와 가치들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정책의 한국적 지형을 그려보고, 한국 문화정책에 적합한 이론적 틀을 재설정하는 작업 역시 필요하다.

○ 문화통계의 적합성: 정책을 위한 조사인가 정책에 대한 조사인가?

2016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생산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는 18종에 이르고 있다. 이는 통계청을 제외하고 통계생산 규모에 있어 중앙행정 기관 중 세 번째로 많은 양에 해당한다(박근화 외, 2016). 1990년대 문화예술통계가 양적 기근에 시달렸던 것을 생각해 보면,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사회가 문화정책을 위한 조사와 통계 측면에서도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점차 많은 통계자료가 생산, 집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한 학술 연구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문화 분야의 통계들 대부분이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어 문화정책 관계자와 수요자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정치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조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존 자료가 갖는 이 같은 이론적 취약성은 학문적인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화 관련 국가 통계의 부재로 이어지고, 이는 문화정책

을 둘러싼 활발한 학문적 논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화관련 국가 통계의 이론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학문적 연계를 강화하고 문화생태계 전반에 걸친 다양한 행위주체의 의견이 종합된 조사 자료의 개발을 통해 문화정책 연구와 문화정책 실행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문화정책에 관한 설문 문항을 개발함에 있어 조사대상의 다변화와 조사내용의 다각화 역시 추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측면들을 조망하여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문화정책을 '위한' 조사뿐만 아니라 문화정책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문화향수 실태가 아닌 문화정책의 지원 대상이 되는 문화영역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등의 설문 문항을 개발하여야 한다. 문화통계와 관련해 이 연구에서 수행하는 주요 분석과 시도들은 문화정책에 관한 학문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보다 시민적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한국 문화정책의 명확한 방향 설정을 가능하게 하는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작업과 더불어, 이에 근거한 조사 자료 개발을 통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여수. 1988. "문화정책의 이념과 방향." 『문화정책논총』 1: 19-32.
문화체육관광부. 2014. 『문화예술정책백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광무. 2013. 『한국 문화정책론』. 김영사.
박근화 외. 2016. 『국가 통계 정책 변화에 따른 문화체육관광 통계 개선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종국. 1988. "문화정책의 기초와 과제." 『문화정책논총』 1: 33-63.
이병량. 2004. "한국 문화정책의 변화 추이와 내용에 관한 분석: 문화예산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8(3): 99-125.
_____. 2007. "문화와 권력: 문화정책연구의 새로운 관점."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4(3): 169-187.
정갑영. 1994. "세계화의 의미와 문화정책의 기본방향." 『문화정책논총』 6: 1-24.
정홍익. 1993. "문화정책의 가치론적 접근." 『문화정책논총』 5: 46-68.
홍기원. 2009. "문화정책 연구에 대한 학문 분야로서의 정체성 탐구." 『문화정책논총』 21: 89-104.

1) 정부가 문화예술지원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미국 역시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및 지원 당위성을 논의하기 위해 열띤 논쟁의 과정을 거쳤으며, 그 과정에서 문화경제학과 예술경영학이 학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제3세션

주제토론

05

지정토론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통계센터장

지정토론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통계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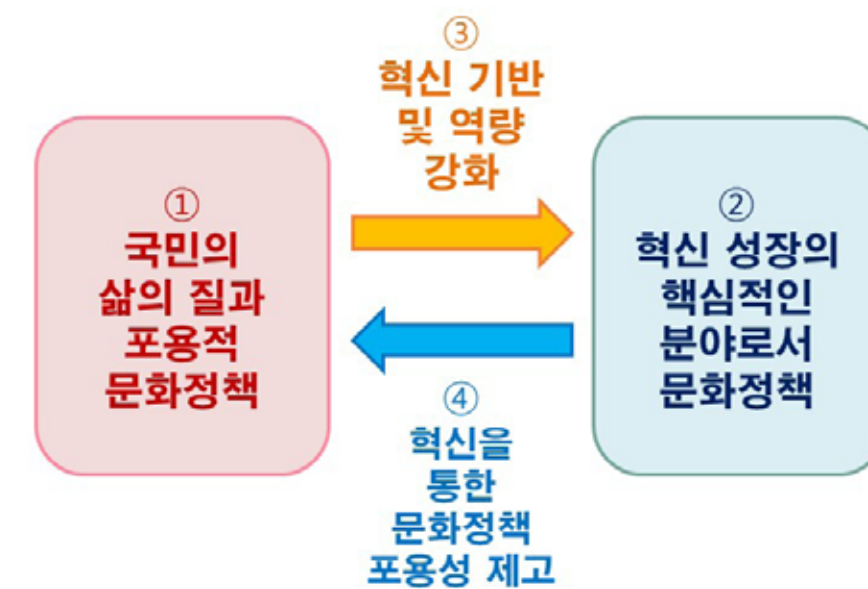
2016 ~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통계센터장
 2000 ~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사회복지정책)
 2017 ~ 현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총괄생계분과 위원
 2017 ~ 현재 사회보장위원회 재정통계전문위원회 위원
 2018 ~ 현재 국가통계위원회 통계데이터분과 위원
 2018 ~ 현재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실무위원회 위원

2019 포용적 문화국가 포럼 토론 (2019.5.28)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문화정책의 역할 강화 방향

최 현 수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통계센터장)

<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문화정책 역할 강화 방향 >



<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문화정책 역할 강화 방향 >

1. 문화정책의 포용성 제고

- ☞ 문화비전 2030의 3대 가치(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실천을 위한 문화정책 포용성 및 공공성 강화 (지역 문화격차 및 문화소외계층 해소, 문화예술 관련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통합 문화바우처 지원대상 및 보장수준 확대)
- ☞ 지역사회 중심 보편적 서비스 및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 인프라(생활 SOC) 구축과 연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로서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의 선택적 일자리 확대
- ☞ 방과후 돌봄 및 Community Care 확대 등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성 강화와 연계(예: 영국 외로움 대응과 사회적 관계망 강화 대책)한 일-돌봄-여가의 균형을 위한 문화서비스 및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 ★ 문화예술체육 분야 사회복무요원 운영 및 사회공헌 활동 지원으로 문화소외 지역 및 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확대 제안

<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문화정책 역할 강화 방향 >

2. 혁신 성장의 핵심 전략으로서 문화컨텐츠 산업 확대

- ☞ 혁신 성장의 핵심 전략 분야로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Pop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컨텐츠 산업, 관광산업 지원 확대
-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문화 인프라와 다양한 문화서비스 확대
- ☞ 지능정보기술 및 혁신 성장의 핵심 전략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문화예술 창작 및 문화컨텐츠 관련 청년 스타트업 지원 확대
-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5G, 자율주행차량, 바이오헬스 등 연계)

<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문화정책 역할 강화 방향 >

3. 포용적 문화정책을 통한 혁신 기반 및 역량 강화

- ☞ 다양한 문화서비스와 문화예술교육 확충 및 공공성 강화를 통해 사회의 창의성 확산 및 사회 전반의 혁신 기반 및 역량 강화
- ☞ 기존의 저소득층 취약계층 중심의 문화 향수 기회와 비용 지원 문화예술교육 기회와 경험 제공을 넘어 생애주기별로 보편적인 문화예술 경험을 통한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제고 뿐만 아니라 문화 참여를 매개로 하는 사회 변화와 혁신, 협업과 융합을 통해 지역사회와 시민의 혁신 기반과 역량 강화
- ★ (사례 : 미국 Urban institute, Cultivating young artist as Social change makers)
- ☞ 문화 경험을 통한 창의성과 혁신 역량 기반의 새로운 문화컨텐츠 개발 및 창업 활성화 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확대

<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문화정책 역할 강화 방향 >

4. 문화정책 분야 혁신을 통한 포용성 제고

- ☞ 문화컨텐츠 산업 및 문화예술 분야 분배 구조 개선 및 일터 혁신, 사회안전망 운영 패러다임 혁신을 통한 포용성 제고
- ☞ 돌봄서비스 제공 노동자의 삶의 질이 중요한 것처럼 문화컨텐츠 제작 인프라와 문화예술계 종사자 삶의 질 제고 역시 중요
- ☞ 문화 산업 분배구조 혁신과 문화예술 종사자들에 대한 문화서비스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통한 포용성 제고 필요
- ★ (제안) 문화컨텐츠 산업 분배구조 개선 및 문화 자본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현행 사회보험 운영 패러다임 혁신 및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서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검토 등 현행 잔여적, 선별적 예술인 복지제도 패러다임 근본적 전환

〈 지속 가능한 포용적 발전 전략과 목표 설정을 위한 사회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및 정책 지표 제안 〉

☞ UN SDG & K-SDG 확장한 “SIDG” 제안

(최현수, 포용국가비전과전략기반사회정책통계지표 개발 연구, 2019년 발표 예정)

기존의 경제-사회 중심의 목표에 환경 영역을 추가하여 주목받은 UN SDG & K-SDG를 넘어 문화적 포용성의 개념을 확장하여 SIDG(Sustainable Inclusive Development Goal)를 선제적으로 개발 및 구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및 통계청의 지원과 국내 논의를 거쳐 향후 국제 컨퍼런스 및 국제기구를 통한 제안 예정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비전뿐만 아니라 OECD 등 국제기구가 포용 성장을 통해 강조하고 포용의 개념을 문화 영역으로 확장하여 경제-사회-환경-문화 영역 등 4개의 정책 축을 중심으로 하는 SIDG(Sustainable Inclusive Development Goal) 개발 연구 중

〈 지속 가능한 포용적 발전 전략과 목표 설정을 위한 사회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및 정책 지표 제안 〉

현재 환경부와 통계청을 중심으로 UN에서 제시한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구조(17Goals)에 따라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K-SDG 추진 중



〈 지속 가능한 포용적 발전 전략과 목표 설정을 위한 사회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및 정책 지표 제안 〉

☞ UN SDG & K-SDG 확장한 SIDG 제안

(최현수, 포용국가비전과전략기반사회정책통계지표 개발 연구, 2019년 발표 예정)

SDG는 기존에 강조된 경제(성장), 사회(분배 및 삶의 질) 영역에 환경(우리 삶과 관련된 외부적, 자연적, 물리적 환경) 영역을 추가

- ★ SIDG는 기존의 경제-사회-환경 영역의 포용성 뿐만 아니라 문화적 포용성에 주목하여 문화(삶의 질과 관련된 내적, 심리적, 문화적 가치관 등) 영역을 추가(17 Goals + 문화 영역 Goal 추가)
- ★ 국제사회 및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성별 인종 민족 종교 세대 간의 문화적 갈등과 폭력으로 인한 지속 가능한 발전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통한 경제 사회 환경 등 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 및 삶의 질을 완성한다는 의미를 강조함

Thank you

감사합니다

2019 포용적문화국가포럼

| 제4세션 종합토론

<메 모>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주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본 포럼은 이윤을 넘어 문화 분야의 지속성을 생각하고, 포용국가의 실현에 함께하는 기업과 함께 합니다.

 **컬처앤유**
문화평등사회를 만들어가는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 culturenu.co.kr

 **공공디자인이즘(Public Design ISM)**
친환경 섬유로 제작하는 디자인 사회적기업 | www.pdism.com

 **메이드인강화-오소소**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강화 소창 브랜드 | www.ososo.org

 **두루행복(DOOROO)**
가족공방 및 디자인인문구 전문 사회적기업&장애인 기업 | dooroo.or.kr

 **아이엠그리너(IamGreener)**
친환경 테이크아웃 용품을 고민하고 개발하는 브랜드 | iamgreener.modoo.at